

第243回國會
(定期會)

國會運營委員會會議錄 第 12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11月5日(水)

場 所 國會運營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김덕배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예산구조 및 편성과 관련

먼저, 예산구조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중앙인사위원회 예산구조는 기관운영, 기관운영기본사업비, 전자인사시스템 등 3개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기획예산처에서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부서 또는 업무성격별로 통합하여 편성하기로 정함에 따라 1개의 세항으로 예산구조가 단일화되었습니다.

세항이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경상경비와 기본사업비를 단일세항으로 통합할 경우, 예산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의 예에서와 같이 단일세항으로 된 예산 편제하에서는 예산과목이 동일한 경우, 사업목적이 다르더라도 중앙인사위원장의 재량하에 전용 절차 없이 용이하게 조정하여 집행할 수 있으므로 예산집행 내역의 파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는 직제상 8개 과를 인사관리심의관, 인사정책심의관 및 인사정보심의관의 담당 업무로 구분하여 각 심의관이 2~3개 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동 조직의 실질적 부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각 심의관별로 3개의 세항으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의 이러한 의견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 예산편성과 관련

2004년도 중앙인사위원회 예산편성은 기본사업

비의 경우 기본경비, 전산운영비, 그리고 사업성 기본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와 전산운영비는 하나의 세세항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성 기본사업비는 사업 성격에 따라 6개 세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의 관서운영비에 계상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총 19억 6300만 원 중 사업성 기본사업비와 관련된 경비로 3억 7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성 기본사업비 관련경비를 기본경비에 통합 편성한 사유는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 성격을 달리하는 예산을 통합 편성하는 것은 사업별 예산 규모의 파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당초 편성된 목적과는 달리 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경비에 편성된 사업성 경비의 경우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각의 해당 기본사업비에 편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앙인사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규모와 관련

중앙인사위원회의 연구용역은 인사정책을 개발하거나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연구용역 예산은 8억 500만 원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연구용역비의 최근 4년간 결산내역을 보면, 연구과제 1건당 평균 집행액은 2001년 5500만 원, 2002년 5200만 원이며, 2003년의 경우에도 1건당 집행 예정액이 5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는 인사정책·급여정책·성과관리 및 정보관리 4개 분야에 대하여 12개 연구 과제 용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금년도 예산 8억 500만 원에 대비해 0.4%가 감액된 8억 2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국 2004년도 연구용역과제 1건당 평균 용역비는 금년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에 이르는 액수입니다.

이는 최근 4년간 다른 부처의 1건당 평균 용역비와 비교해 볼 때, 재정경제부보다는 1.7배, 기획예산처보다는 2.5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부처와 비교해 볼 때 과제당 연구용역 예산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과 관련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은 정보화 국제화 등 외부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2003년도에 6억 5800만 원, 2004년도에는 올해보다 2억 8800만 원이 감소한 3억 7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중소기업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금년도에 비해 2억 원 이상 대폭 감소한데서 주로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연구용역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연구용역 과제 계획과 집행 현황이 상이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연구용역 과제에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현황평가 및 발전방향, 중소기업 해외진출 현황 및 지원 연계성 강화 방안, 도하 아젠다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된 실적을 보면, 중소기업 시책 평가 지표 개발,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지식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제고 방안 등 계획과는 다른 과제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용역과제를 선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용역과제의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

□정부의 각 부처에 대한 정책점검 사업과 관련
본 위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정책점검사업은 주요 재정사업 중 사후관리 및 집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기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액을 금년도와 동일한 2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높은 수준의 이월이 발생하고, 예산집행률이 저조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올해 편성된 예산도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먼저 2000년도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62%에 불과한 반면 이월액은 6500만 원, 불용액은 1100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집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5%에 머물렀으며, 이월액이 8900만 원, 불용액이 3000만 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자그마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집행률이 71.5%로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지만 이월액이 5600만 원, 불용액이 100만 원으로 나타나 여전히 20%에 가까운 예산이 예산편성 계획과는 달리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책점검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주요 재정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나, 금년도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정책점검사업이 일반 정책연구개발사업과 크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간 경쟁 촉진 및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와 같은 사업의 경우, 정책점검사업인지, 정책개발사업인지 불분명하며 연구 주제와 방향이 오히려 정책개발사업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점검사업의 추진 시기와 예산 규모를 보다 철저히 검토해 책정하고 조정해야 할 것이며, 본래 목적과 다른 사업이 추진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시행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분명하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지적과 관련해 우선 기획예산처장관께서는 지난 3년간 예산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와 사업 추진현황이 정책연구개발사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점검사업의 개선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사업성과평가사업과 관련

재정사업성과평가사업은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분석·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경과 과정은 추진현황 분석, 성과목표 추정, 성과지표 설정, 분석·평가, 결론 도출의 순으로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업무의 특성상 명확한 성과목표의 설정 및 성과지표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이나 평가가 쉽지 않아 이는 형식주의로 흐를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얻은 성과 정보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어 사업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는 국회의 예·결산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산하기관관리사업과 관련

정부산하기관관리사업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억 원,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 134% 증가한 2억 3400만 원이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대폭 증가된 데는 종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담당하던 산하기관 경영혁신 점검·평가 사업을 위원회 폐지에 따라 정부산하기관관리사업에 계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정부산하기관관리사업에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대비하여, 동 법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인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각각 5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은 그 특성상 형태와 종류 및 기능이 다양합니다. 평가지침을 기관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산하기관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설립상 법적 형태, 정부의 재정지원 형태, 그리고 기관의 수행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산하기관을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 청소년비즈쿨사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한 이유는?
2. 1번 사례에서 보듯이 정책집행형 사업은 실무부처사업으로 이관하고 위원회에서는 정책의 연구·평가, 분석 등과 관련된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3. 전국중소기업인대회 등의 개최비 1억 원은 상기 2번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는 것인지?

○金鶴松 委員

(중앙인사위원회)

■관서운영비 과다계상

2004년도 기관운영 기본사업 관서운영비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03 년도 (A)	2004년도		증 감 (C=B-A)	증감률 (C/A)
		요구	조정(B)		
관서운영비 (1101-201)	1,892	2,304	1,963	71	3.8

○2004년도 중앙인사위원회의 기관운영 기본사업비 중 관서운영비 예산안은 19억 6300만 원임.

* 2003년(18억 9200만 원) 대비 7100만 원 증

가(3.8%)

* 증가 사유 : 청사 임대료(201-07)가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가하는 등 물가 인상을 반영

○ 관서운영비는 과거 수년간 계속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전용 재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과다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 관서운영비 집행률

1999년 54.8%, 2000년 68.4%, 2001년 81.8%, 2002년 91.1%

○ 2003년 8월 말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18억 7900만 원의 무려 7.3%인 1억 38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11억 원이 집행되었는 바,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8.5%에 머물고 있음.

2003년도 관서운영비 집행내역(03. 8 현재)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전용증감액	전용률	예산현액	지출액
2003년	1,879	△138	7.3%	1,741	1,100

○ 관서운영비는 해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데도 오히려 매년 예산은 증가해 왔으며, 2004년 예산안도 2003년 대비 3.8% 증가하고 있는 바, 동 관서운영비는 과거의 집행실적과 2003년 현 집행상황을 감안해 볼 때,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구축사업

□ 개요

◇ 사업목적

○ 모든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인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인사자료를 DB화

○ 인사권자에게 적재적소 인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가능하도록 지원

○ 인사부서의 역할을 종전의 보수적인 관리부서에서 개방적인 서비스 제공부서로 전환

◇ 사업내용

○ PPSS 프로그램 개발 : 채용에서부터 퇴직까지의 전체 인사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프로그램 개발

○ 장비 및 운영 S/W 구입(인프라 구축) : 부처별 서버 및 관련 운영 S/W 설치

○ 유지보수관리 : 서버 및 기본 프로그램 유지보수, 제도변경사항 반영, 새로운 추가기능 등 프로그램 유지보수 실시

◇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중앙인사위원회(주관기관), 한국전산원(전담기관), 시스템 공급자

○ 사업집행 절차

- 프로그램 개발 : 분석→설계→구현→시험→적용

- 장비 및 기본프로그램 보급 : 발주→조달→수요기관설치→운용

- 유지보수 실시 : 유지보수계약 체결→유지보수 실시

2004년도 PPSS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3예산(A)	2004 예산안		증 감 액(C=B-A)	증 감 륜(C/A)
		요 구	조 정(B)		
계	596	34,291	968	372	62.4%
관서운영비	139	922	613	474	341.0%
여 비	10	26	9	△1	△10.0%
업무추진비	23	68	21	△2	△8.7%
용 역 비	424	8,840	325	△99	△23.3%
자산취득비	-	24,435	-	-	-

* 증가사유로는 2002년까지 행정자치부 등 35개 중앙행정기관에 보급하였고 금년에는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에 보급함으로써 2003년 말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구축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이에 따라 2004년도에는 51개 중앙행정기관에 보급 완료한 PPSS에 대한 전산장비 및 응용 S/W 유지보수 비용이 다소 증가함에 기인함.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2000년 10월 사업에 착수한 이후 2001년 9월 동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4개 부처에 시범적용을 하였고, 2002년도에는 31개 중앙부처에 대한 구축을 완료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16개 중앙부처에 추가적으로 보급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음. 따라서 2004년부터는 동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음.
-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되어 구축된 PPSS가 그 기능을 다하고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동 시스템이 전 부처로 확산되어 원활하게 활용되어야 함. 동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른 업무의 편리성 및 효과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그러나 현재 시스템의 확산 정착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인사 담당자의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PPSS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인사담당자의 업무부담 과중으로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처리방식에 익숙하여 확산에 다소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전 부처에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기존의 인사정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의 입력 및 검증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할 인사부서의 직원들이 기존의 인사업무와 병행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의 특성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비단 동 시스템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모든 정보화 작업에 수반되는 문제라고 할 것임.
 - 이에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인 부처는 활용 실적이 좋은 편이나 소극적인 일부부처의 경우에는 시스템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인사입력 자료의 DB화 지연 및 인사 담당자 업무 부담에 따른 사용의지 부족 등의 이유로 기록관리 및 통계자료 산출 위주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경우 인사정보 데이터의 입력·검증작업과 인사기록카드와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는 기간이 필요함에 따른 인

사부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앙인사위원회는 동 시스템의 활용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완과 함께 시스템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PPSS 확산추진반 인력을 각 부처에 일정 기간 상주시켜 인사 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 최소화 및 해당부처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맞춤형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활성화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PPSS 활용 우수기관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상시교육체계의 확립이 필요함.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 마련

- 비록 동 시스템이 시범기관을 설정하여 시범 운영을 마쳤다고는 하지만 2002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지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2002회계연도 감사원 결산검사보고서의 지적에 따르면 신규도입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한 후 다른 기관으로 확산하여야 하나, 동 시스템의 경우 시범기간을 1개월 반으로 짧게 계획하여 기존 데이터 변환 및 사용자 교육만 실시하였으며 기초자료조차 입력하지 못하는 등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실시하였음.
 - 그 결과 인사기록 및 급여업무에는 일부 사용하고 있지만 평정 및 승진작업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다면평가제, 목표관리제 등 일부 업무의 경우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업무에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 정보화 작업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는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에 입력만큼이나 그 프로그램의 사활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체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사후관리는 개발과정 못지않게 힘든 부분임. 유

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그램이 사장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유지보수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동 시스템의 원활한 활용 및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활용에 있어서 각 부처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취합하여 좀더 이용이 편리하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해킹 및 정보유출 방지

○PPSS에서 통합관리되는 인사자료는 그 특성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해킹 및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함.

○따라서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 행정정보의 불법유출, 훼손·변조 등 위협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물리적 보안대책으로 네트워크-서버단계, PC-사용자단계 각각에서 체계적인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법·제도적 보안대책으로 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개별 공무원의 인사자료의 수집 및 관리·활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킹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으로 아무리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음. 따라서 동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는 항상 보

안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기술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공무원 보수 현실화

□개요

◇추진배경

○공직자가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필요

- 김대중 전 대통령,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약속 후

- 2000년부터 공무원보수현실화5개년계획 수립

◇목적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모든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2003년도 연도 중 처우개선 추진

- 민·관 보수실태 조사결과, 금년도 접근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하반기 중 봉급조정수당을 지급

○2004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 민간접근목표 100%를 달성하기 위한 처우개선안 마련·추진

보수현실화 5개년 계획의 연차별 접근목표 및 접근율

(단위 : %)

구 분	2000년(1차)		2001년(2차)		2002년(3차)	2003년(4차)	2004년(5차)
	6월 기준	연 말	연 초	연 말			
민간접근목표	88.4	91.1	93.8	95.3	96.8	98.4	100.0
민간접근율	•	91.1	•	95.3	96.8	97.3	95.4

○공무원 보수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잇따른 삭감으로 민간 중견기업의 88% 수준까지 떨어졌음.

이에 따라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 아래 지난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를 각각 인상한 바 있음.

민간임금 접근율도 2000년 91.1%, 2001년 95.3%, 2002년 96.8%를 달성했으며, 2003년은 11월 봉급조정수당을 포함할 경우 잠정적으로 97.3%를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200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로 확정됨에 따라 민간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간의 보수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2004년도는 공무원보수현실화5개년계획의 마

지막 해로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의 100% 수준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었으나 내년 보수 인상률 3%를 감안할 때 민간임금 접근율은 95.4%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0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임.

○동 접근율(95.4%)은 민간기업의 평균임금 인상률을 5.0%로 가정한 것으로 최근 노동부가 밝힌 올해 임금 인상률을 감안할 때 실제 접근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최근 노동부가 밝힌 올해 상반기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인 평균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보수현실화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04년도에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최소 6.6%는 되어야 한다고 함.

◇과거 공무원 보수 인상의 경우 항상 계획 초반 기에는 추진하다가 국가경제 사정상 무산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결국 처우개선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음.

◇물론, 공무원 보수가 국가예산에서 지급됨에 따라 국가경제 사정이나 민간 임금 인상률에 미치는 여파 등을 고려해야 하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하겠으나 또다시 경제사정을 이유로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이 무산된다면 공무원 보수 현실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정책연구개발사업

□개요

◇사업 목적

○정부의 인사개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21C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사개혁을 위해 인사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분석을 토대로 인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함.

◇사업 내용

- 인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급여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용역
- 정보관리에 관한 연구용역

2004년도 정책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2003 년도 (A)	2004년도		증 감 (C=B-A)	증감률 (C/A)
		요구	조정 (B)		
연구용역비	805	801	802	△3	△0.4

2004년도 연구용역과제 및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분	연구용역과제	예산안
합계	12건	802
인사정책 (4건)	- 주요외국의 정무직공무원의 임용기준, 방법, 절차에 관한 연구 - 공무원 직종 구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부처별 자율채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인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기능 조정방안 연구	310
급여정책 (4건)	- 2004년 민·관보수 실태조사 - 중장기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 수립 및 공무원 보수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 연구 - 공직사회 연봉제 확대 방안 - 공무원 급여 포털사이트 개발 용역	195
직무분석 (3건)	- 처, 청, 위원회 고위직 직무분석 - 부처 성과관리 운영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분석 실시 - 직위분류제 도입모형 연구	253
정보관리 (1건)	- 홈페이지 및 정부 인사 포털사이트 개편	44

◇2004년도 연구용역비는 8억 200만 원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전체 예산 94억 700만 원의 8.5%를 차지하고 있음. 동 위원회의 예산이 주로 인건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적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전체 예산 중 실질적인 사업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인사제도에 관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직결되는 제도를 구축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만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임.

◇중앙인사위원회 연구용역비는 설립된 9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8억 원여가 편성되고 있음. 이렇게 적지 않은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이유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 이유인 인사개혁의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 및 정책의 수립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여짐. 따라서 설립초기에는 많은 연구용역비의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2004년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설립된 지 6년째가 되는 해로 연구용역비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설립 초기에는 정책의 수립 및 방향의 제시를 위해 동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6년째를 맞이한 현재에 있어서는 기존 발주된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활용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임.

○1999년 5월 중앙인사위원회의 설립 이후부터 2003년까지 투입된 연구용역비는 총 38억 800만 원으로 77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라고 할 것임.

연도별 예산대비 연구용역비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전 체 예산액	연구용역 예산액	비 율	연구용역 발주건수
1999년	4,055	501	12.4%	15건
2000년	5,354	830	15.5%	15건
2001년	6,002	842	14.0%	18건
2002년	6,918	830	12.0%	15건
2003년	7,810	805	10.3%	14건
2004년	9,408	802	8.5%	12건
계		4,610		89건

◇적정수준 이상의 예산편성은 자칫 불요불급한 연구과제 수행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음.

○99년 이래 발주된 연구용역의 과제를 살펴보면 유사·중복되는 과제 및 동 위원회의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과제가 발주되고 있는 등 과제 선정에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매년 연례적으로 일정액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 따른 기계적인 예산집행이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겠음.

○또한 연구과제당 계약금액으로 보면 3년간 연구과제 1건당 평균금액이 5000여만 원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일반적인 연구용역 수준(여성부 2250만 원, 기획예산처 1775만 원)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금액임.

◇따라서 연구용역의 적정한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 연구결과가 해당부서의 정책으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연구단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적절한 연구과제 및 우수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추후 연구결과의 활용도라고 할 수 있는바, 정책연구용역의 특징상 연구결과가 실제로 정책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용역 예산액은 일단 배정되면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 한 100% 지출되는 경향이 있는바, 사후 실적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한 회계관리와 정책개발 연구결과가 얼마만큼 실제 정책수립에 반영되는가 하는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결과를 다음번 용역대상 선정 작업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feed-back)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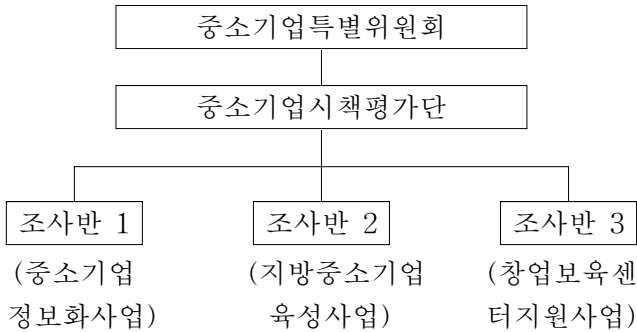
2004년도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안	증감액
시책평가단 운영 및 시책 실태조사(관서운영비)	105	20	△85
시책평가단간담회(업무추진비)	5	5	-
해외중소기업지원정책 시스템조사 등(여비)	-	12	12
시책평가 및 예산사전 조정 관련 연구용역	-	661	661
합 계	110	698	588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은 각 부처의 중소기업 시책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중

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간의 우선순위 설정과 중복조정 등의 예산 사전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사업 추진체계>



◇동 사업의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금년 5월에 중소기업시책평가단을 구성하여 3개 분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평가단을 확대 개편하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평가·사전조정위원회를 두고, 평가대상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예산의 사전조정을 추진할 계획임.

◇2004년도의 경우 2003년(1억 1000만 원)에 비해 5억 8800만 원 증가한 6억 9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중소기업 시책 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6억 61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음.

이러한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의 상시 평가시스템 구축사업과의 중복문제

○중소기업청에서도 금년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기업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시책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시책을 점검·평가할 계획으로 있음.

○이에 따라 중기특위의 시책평가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상시평가·정비시스템 구축사업과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동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중소기업청 연구용역 내역

과 제 명	과 제 내 용	용역금액	용역기관	용역기간
중소기업 장기발전 전략과 비전	○중소기업의 경쟁력 평가 ○중소기업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중소기업 주요 지원시책 분야별 평가 (창업, 벤처, 자금, 기술, 판로, 인력, 정보화, 수출, 품질, 직접 보호제도, 지방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여성기업, 협동조합 등) -현행 주요 지원시책별 개편 방안 -중소기업의 장기 성장비전과 이에 따른 단기 정책방향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방안	8억 원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	산 업 연구원	2003. 6. 13~ 11. 30

◇예산사전조정제도 시행의 문제

○중기특위는 내년부터 예산사전조정을 제도화 하기 위해 중기특위규정(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기특위가 동 사업의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사전조정제도’도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예산 사전조정 실시효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

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평가대상 사업선정 범위의 문제

○내년부터 16개 부처에 산재한 195개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2003년 기준, 약 8조 3000억 원 규모) 전반을 10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전부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 대상 사업의 합리적인 조정도 검토

되어야 할 것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의 중복 문제와 법률적 근거의 미비 등 동 사업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

2004년도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안	증 감 액
○기타직보수	30	32	2
○관서운영비	103	27	△76
○여비	10	6	△4
○업무추진비	81	81	-
○연구용역비	434	224	△210
합 계	658	370	△288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은 정보화 국제화 등의 외부 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금년(6억 5800만 원) 대비 2억 8800만 원이 감소한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

이러한 감소는 중소기업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금년도(4억 3400만 원)에 비해 대폭 감소(2억 1000만 원)한데 주로 기인한 것임.

◇금년도 연구용역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연구용역사업이 계획과 추진실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이와 같은 문제는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음).

2003년도 연구용역과제 계획과 집행현황(9월 말) 비교

연번	2003계획	2003집행현황
1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관련단체의 역할과 성과 및 발전방향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평가와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2	소기업·소상공인지원 현황평가 및 발전방향	중소기업 시책평가 지표개발(창업보육지원사업 분야)
3	중소기업 해외진출 현황 및 지원 연계성 강화 방안	중소기업 시책평가 지표개발(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 분야)
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수출 확대방안	중소기업 시책평가 지표개발(정보화지원사업 분야)
5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정부 및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활동 지원현황 비교 조사 연구	중소기업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위험 DB 구축방안
6	벤처기업 지원시책 조사·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7	도하 아젠다(DD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
8		지식이전을 통한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 제고 방안
9		2만 불 달성을 위한 중소 제조업의 선진형 생산구조 구축방안

◇이러한 현상은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용역과제를 선정하는데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과제선정 시 더욱 신중해야 함은 물론, 이를 위한 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직제개편 관련

- 국회 예산정책처와의 기능 중복 문제

◇지난 3. 28일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하여 기획예산처 직제를 개편하였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정부개혁실을 재정개혁국으로 축소하면서 재정기획국을 재정기획실로 확대 개편한 것입니다.

○정부개혁실 기능(재정개혁, 공공개혁, 행정개혁) 중 행정개혁 기능을 행자부로 이관, 재정개혁, 공공개혁 기능으로 재정개혁국 신설

○재정기획국(1국 5개 과)⇒재정기획실(1실 3심의관 10개 과)

◇이중 재정기획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직제 개편전 재정기획국으로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재정기획실로 확대개편한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등 재정기획 기능 강화로 중장기 재정관리와 국가발전전략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

○재정기획 부문에서 재정사업 분야별 자원배분과 사업성과평가를 담당하고 이를 예산편성과 연계

-사업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환류(feedback)시스템의 구축으로 재정의 효율성 도모

◇그렇다면 재정기획국이었을 때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조직을 2배나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기존 재정기획국의 역할 미흡

◇아시다시피 국회 예산정책국이 설립되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산정책국의 기능을 보면 기획예산처의 재정기획실의 임무와 상당 부분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셨습니까?

* 국회 예산정책처 기능

부 서	기 능
예산분석실	- 예결산 및 기금에 대한 연구분석 - 법안비용 추계
경제분석실	- 거시경제 동향 분석 전망 - 경제정책 연구 분석 - 국가재정 운용의 분석 - 세수 추계
사업평가국	- 국가 주요사업 분석 평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명분에 의한 재정기획실로의 확대개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획예산처가 공공개혁, 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여타 국가기관의 구조 및 예산 조정을 해온 부처인 만큼 정작 자신의 몸집을 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시선과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왕에 직제개편을 통해 재정기획과 재정개혁 부분에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면 차후 임무수행에 있어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앞서 지적한 대로 국회예산정책처와의 기능중복으로 인해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에게 옥상옥으로서 발목잡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정책처와 충분한 업무 조율을 당부합니다.

□예산제도개선사업

예산제도개선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3 예산 (A)	2004 예산안 (B)	증감 (C=B-A)	증감률 (C/A)
계	-	584	584	순증
관서운영비	-	17	17	
여 비	-	120	120	
업무추진비	-	102	102	
위탁사업비	-	300	300	
자산취득비	-	45	45	

◇사업목적

○급속히 변화하는 재정운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운영 기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발전을 도모.

◇사업내용

- 예산편성 절차, 예산구조 개편 등 재정개혁 현안 과제에 대한 국제 공동프로젝트 수행
- OECD 등 국제기구와 재정운영제도 관련 협력 활동 추진
- 주요 선진국 예산제도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
- 예산편성 및 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지자체 포함) 연찬회 개최 등
- ◇2004년 예산안을 보면 3개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1억 9500만 원)
 - 재정사업 성과분석 및 평가(1억 5000만 원)
 - 예산제도개선사업(5억 8400만 원)
- ◇이중 예산제도개선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 ◇이 사업을 살펴보면 재정정책 연찬회, 해외여비, 위탁사업비, 자산취득비 등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범부처 연찬회 비용
 - 위탁사업비는 한국조세연구원에 위탁하여 OECD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비용
 - 자산취득비는 기획예산처의 낡은 비품을 교체하는 비용
- ◇그 결과 이 사업은 관계 없는 여러 사업이 같이 합쳐져 주요사업으로서의 독자성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기본사업비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의 상당부분이 이 사업(주요사업비)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 예산제도 조사여비는 각 실국의 기본사업비 중 여비항목으로도 처리 가능한 항목
 - 자산취득비도 기본사업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임.
- ◇장관,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가 엄연히 구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비로 합쳐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요사업비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자 기본사업비에 포함될 수도 있는 항목을 주요사업비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처의 주요사업비는 2003년 예산에 비하여 3200만 원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비의 증가여력이 있음.
 - 폐지 : 공공부문혁신대회사업(2억 6000만 원)
 - 정부혁신추진위운영사업(10억 2800만

원)

- 신규도입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1억 9600만 원)
- 재정사업 성과평가(1억 5000만 원)
- 예산제도 개선(5억 8400만 원)
- 반면, 기본사업비는 2003년에 비하여 2억 3200만 원 증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사업비의 증가여력이 별로 없는 상황임.
- ◇국가 예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크나큰 명분을 가진 신규사업이라면 당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 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단한 실망감을 느끼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예산편성 방침
 - 장관, 2004년 예산편성 방침에 부서별 또는 사업성격에 따라 관련 경비를 일원화하여 편성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그 이유(목적)가 무엇입니까?
 - 세항이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중앙부처의 경우 부서별 또는 사업별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일원화함으로써 부서별 예산현황 파악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 건교부, 산자부 등 예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나 운영위 소관 기관인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인사위원회 등 소규모 기관인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셨습니까?
 - 소규모 기관인 경우 기관 전체의 예산을 단일세항으로 편성하면 예산 소관부서나 사업목적이 다르더라도 예산회계법상의 전용절차 없이 기관장의 재량하에 예산을 타용도로 집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 실제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의 경우 2003년 예산구조는 2개의 세항(1101 기관운영비, 1102 기관운영사업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4년도 예산안에는 1개(1101 기관운영비)로 통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편성 방침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작용까지 고려해서 보다 신중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소규모 기관의 경우 단일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손희정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관서운영비 문제

다음은 관서운영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2002년도 세출결산 심의 때, 지난 수년간 계속된 관서운영비의 저조한 집행률 문제를 지적하면서 연례적인 과다계상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국에서 제출한 금년 8월 말 현재 관서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벌써 당초 예산액 18억 7900만 원의 7.3%인 1억 3800만 원이 전용 감소되었고 11억 원이 집행되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겨우 58.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입니까?

문제는 매년 집행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오히려 매년 증가해 왔다는 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관서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19억 6300만 원으로 상정되어 있어, 역시 과다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중앙인사위원회의 내년도 관서운영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를 고려하실 의사는 없으신 지 위원장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 문제

다음은 공무원 보수 현실화 문제입니다.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2004년까지 민간 중견기업 수준까지 올린다는 5개년 계획에 따라, 민간 임금 접근율은 2002년에 96.8%를 달성했고, 금년에는 11월 봉급조정수당을 포함할 경우 잠정적으로 97.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러나 정부는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로 확정함으로써, 민간임금과 공무원 보수 간의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년도 보수 인상률 3%가 민간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을 5%로 전제로 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민간 임금 접근율은 94.5%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앙인사위에서는 현재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2004년도에 당초 목표, 즉 민간 중견기업의 10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최소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번 정부의 결정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심각한 사기저하가 우려되며, 국가경제 사정을 이유로 5개년 계획이 결국 무산되면, 공무원 보수 현실화는 요원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직위 시험 시행 공고비 문제

다음은 개방형직위 시험 시행 공고비 문제입니다.

중앙인사위의 기본사업비에는 개방형직위 시험 시행 공고비가 금년의 1억 2200만 원에 이어 내년도에도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개방형직위의 모집에 있어서 유능한 인재의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개방형직위의 임명이 각 부처 소관사항이며, 소관부처에서 자체 예산으로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중앙인사위의 개방형직위 시험시행 공고를 위한 홍보 활동은 각 소관부처의 활동과 중복된다는 건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소관부처와 중복되는 개방형직위 시험 시행 공고비는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산 계정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중앙인사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 중복 문제

다음은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의 중복 문제입니다.

내년도 중기특위의 주 사업비 예산은 청소년 비즈쿨사업이 중기청으로 이관되어, 실제로는 2억 6400만 원 소폭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 중기정책 연구평가사업 예산이 3억 늘어난 사업이 특위의 핵심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책연구사업이 2억 9000 감소한데 반해, 시책평가사업은 5억 9000 증가하여, 결국 특위의 최대 핵심사업은 중기시책 평가사업이라 볼 수 있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같은 최대 핵심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중기청이 금년에 8억 원의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내년부터 구축 시행하려는 중소기업주

요시책상시평가시스템구축사업과 중복된다는 건데, 명백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내실 있는 평가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위의 내년도 평가 사업 시행 내역을 보면, 현재 190여개에 이르는 각 부처의 중기 지원 사업 전체를 10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이를 3개월 만에 전부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장의 견해를 우선 밝혀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며, 설령 평가를 했다 한들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축소하든지 하는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본 중기정책연구평가사업 예산은 금년 대비 축소하든지 또는 최소한 동결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

□부담금 증가 문제

다음은 준조세인 부담금의 증가 문제입니다.

준조세로 분류되는 각종 부담금의 지난해 징수액이 7조 448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나 증가하여, GDP의 1.2%, 조세수입 대비 5.8%, 1인당 부담액은 15만 6000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지난 98년 이후 폐지된 부담금이 10개인 반면, 신설된 부담금은 무려 20개에 달했고, 부담금 폐지로 감소된 징수액이 4000억 원인데 반해, 부담금 신설로 증가된 징수액은 1억 4000억 원에 달한 결과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동안 정부는 준조세를 대폭 정리해 국민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거듭 공언해 왔지 않습니까? 조속히 각종 부담금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해서 폐지 내지는 통폐합하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부담금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점검사업 문제

다음은 정책점검사업 문제입니다.

정책점검사업은 주요 재정사업 가운데 사후관리와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연구용역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활용하여 재정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압니다만, 문제는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높은 이월률이 발생해 예산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 사업추진 내역을 봤을 때 일반적인 정책연구개발사업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따라서, 높은 이월률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예산규모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은 물론이고, 정책연구개발사업과의 분명한 차별화를 위한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륜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 보수 현실화 관련

공무원 보수 현실화 문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0년도부터 공무원보수현실화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하에 매년 6.5~9.7%까지 인상한 바 있습니다.

1. 중앙인사위원장께서는 공무원보수현실화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가 내년도 2004년 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미 발표된 사실입니다만 200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에 불과합니다. 2003년 즉 금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6.5%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최근 노동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인 평균 임금은 전년 대비 10.6%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본 위원의 견해로는 공무원보수현실화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인 2004년도 보수 인상률은 최소 6.6%는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의 인상률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3.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한 공무원 보수 인상 추진 양태를 살펴보면 초반기에는 적극적이다가 국가경제가 나빠지면 호지부지 무산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대해서 불신감을 갖게 하고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공무원 보수가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나라 경제 사정이나 민간 임금 인상률에 미치는 여과 등을 고려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무원 보수 계획이 무산된다면 공무원 보수 현실화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란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라 하지만 보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만 마음을 먹지 않는다고 봅니다.

- 따라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 문제는 중앙인사위원장께서 보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의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다음은 정책연구용역사업비 예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2004년도 연구용역사업비 예산은 8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감소(△0.4%)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사 정책에 관한 연구 4건에 3억 1000만 원, 급여 정책에 관한 연구 4건에 1억 9500만 원,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3건에 2억 5300만 원, 정보관리에 관한 연구 1건에 44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비 예산은 중앙인사위원회 전체 예산 94억 700만 원의 8.5%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인사위원회의 연구용역비는 설립연도인 99년에 5억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매년 8억 원 가량의 연구용역비가 기계적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 중앙인사위원회가 설립된 근본취지가 인사 개혁 방향 설정과 인사 정책 수립에 있는 만큼 설립 초기에는 많은 연구용역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으나 2004년도는 중앙인사위원회 설립 6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함에도 예년과 다름없는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 본 위원의 견해로는 초창기에는 정책의 수립 및 방향 제시를 위해 다수의 연구 과제가 필요하겠으나 이제는 기존에 발주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시기라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연구용역 과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유사·중복되는 과제가 많습니다. 이는 매년 연례적으로 일정액의 과제용역 예산이 편성됨에 따른 결과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 연구용역사업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결과의 활용도라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연구한 과제가 정책에 얼마나 활용되고 반영되었는가 하는 가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점입니다.

- 따라서 정책개발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 수립에 얼마만큼 반영되었는지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다음번 용역 대상 선정 작업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 예산 관련

다음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님께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정책연구사업 예산안을 살펴보면 2003년 대비 2억 8800만 원이 감소한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요인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금년도에 비해 2억 1000만 원이 감소한데 주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은 정보화 국제화 등 외부 환경변화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정책 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도 동의하시죠?
- 그런데 2004년도 연구용역과제추진사업 건수와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9건이던 연구용역 과제 건수가 2004년에는 5건으로 대폭 줄고 예산도 금년 대비 2억 1000만 원이나 감액시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연구용역사업을 대폭 축소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2004년도 중소기업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중소·벤처 기업

성장 지원 방안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 방안
 -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제 병행 실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실태 조사
 -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책 현황 실태조사 등 5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 내용들도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정책에 꼭 반영시켜야 할 과제들이라고 봅니다.
3. 그러나 본 위원의 견해로는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큰 숙제거리로 대두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실업 인력 활용방안’을 연구용역과제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과 평가 사업이 단일화되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사업과 평가사업을 단일화시켜 추진할 경우 어떤 장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정책연구사업과 평가사업을 단일화시켜 추진할 경우 자칫 평가사업에 밀려 정책연구사업에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 관련

다음은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2004년부터 중소기업시책평가단을 확대 개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평가·사전조정위원회를 두는 한편, 평가 대상도 중소기업지원사업 전반 분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내년도 예산에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비 6억 6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 중소기업평가사업은 현재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시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등 예산의 사전 조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 대상 사업을

중전 3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범위를 확대해 나갈 때 수반되는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16개 정부 부처에 산재한 중소기업지원 사업이 195개이고 지원 사업 예산도 2003년 기준으로 볼 때 8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현재 중소기업시책평가단 구성 인원을 살펴보면 정책일반 분야에는 단장과 감사를 포함해서 6명, 경영안정 분야 4명, 경쟁력 강화 분야 4명, 도합 14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을 2004년도에도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평가단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3. 본 위원의 견해로는 아무리 전문가 집단이라 할지라도 14명의 인원이 그것도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195개 중소기업지원사업 전반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자칫하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되었듯이 평가 대상사업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해 볼 의의 없습니까?

○윤경식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연구용역비 규모의 적정성 관련

□개요

- 2004년도 연구용역비는 올해 8억 500만 원보다 0.4% 감소한 8억 200만 원으로 계상됨.
- 2004년도의 경우 인사정책 급여정책 성과관리 정보관리 등 4개 분야 12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임.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최근 4년간 중앙인사위원회의 연구용역비를 살펴보면, 연구과제 1건당 평균 집행액이 99년 3100만 원, 2000년 5300만 원, 2001년 5500만 원, 2003년 5800만 원으로 건당 5500만 원을 상회함.
- 내년도 연구과제의 건당 금액은 올해 58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오른 6700만 원에 이름.
- 최근 4년간 1건당 평균 용역비는 재정경제부 3900만 원, 기획예산처는 2600만 원으로 중앙인사위의 용역비가 1.7~2.5배가 높음.
- 과제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용역비가 많이 들

- 수 있을 것이나 타부처에 비해서 건당 용역비가 2배 이상 비싸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감. 설명 바람.
- 2002년도 및 2003년도 예산집행 결과(과제명, 발주부서, 전결권자, 용역금액, 용역수행 기관, 기간)와 용역 결과물 사본 각 1부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람.
- 전자인사시스템(PPSS) 예산 관련
- 개요
- 전자인사시스템 사업은 공무원의 인사 교육 채용 급여 등 인사정보를 DB화하여 이들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 정부 인사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사업임.
- 이 시스템 구축사업은 2000년 10월 착수, 2004년 5월에 51개 중앙부처에 대한 구축을 완료할 계획임.
- 지금까지 사업비는 2001년도 10억 5000만 원, 2002년도 105억 7000만 원, 2003년도 102억 4000만 원이 투입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됐음.
- 올해는 운영경비로 9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

- 음.
-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시스템 구축보다는 시스템의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이 더욱더 중요함.
- 아울러 수록된 자료가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으므로 정보유출에 대한 별도의 보안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정보 DB의 정부 부처 간 활용계획은 어떻게 수립돼 있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기획예산처)
- 정책점검사업 내용과 예산 관련
- 개요
- 정책점검사업은 주요 재정사업 중 사후관리 및 집행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임.

2003년도 정책점검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 원)

과	제	용역기관	금액	계약기간	활동내역
합	계		199.9		
합리적인 민자사업 수익률 책정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김태윤	26	03. 8. 12-03. 12. 20	진행중
민자사업 추진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 수행 지침 작성 연구		국토연구원 이규방	47	03. 8. 14-03. 12. 20	"
사업자 간 경쟁촉진 및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		Deloitte & Touche	29.9	03. 9. 1-03. 11. 30	"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제도 개선안 연구		(재)한국산업 관계연구원	29	03. 9. 1-03. 11. 30	"
장기대형공사 계약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9	03. 10. 16-03. 12. 15	"
민자사업의 금융 재조달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 연구원	14	03. 10. 24-03. 12. 23	"
국내 SOC 민자투자 사업의 PSC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		AI투자자문	25	03. 10. 24-03. 12. 23	"

- 문제점과 질의 사항
- 2000년 이후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매년 높은 수준의 이월이 발생. 사업추진 시

- 기의 조정 및 적정 예산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본래 목적은 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을 단위 사업별로 점검하는 것임. 그러나 금년도 추진 현황을 보면 일반 정책연구개발사업과 차별화되어 있지 않음.

○2003년도 대상 과제를 보면 민자사업 관련 4개 과제의 경우 용역 발주를 꼭 했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최근 3년간 정책점검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B)	불용액 (C)	이월률 (B/A) (%)	불용률 (C/A) (%)	예산대비 집행률 (%)
		전년도 이월	예비비	이· 전용							
2000	200	-	-	-	200	124	65	11	32.5	5.7	62
2001	200	65	-	-	265	146	89	30	33.6	11.5	40.5
2002	200	89	-	-	289	232	56	1	19.4	0.3	71.5

- 이월·불용액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 정책점검사업은 본래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중요 예산정책 사업을 대상으로한 점검, 즉 주요 국책사업의 선정,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을 심도있게 조사 분석 평가, 그 결과를 예산·재정 정책에 피드백시키는 쪽으로 정상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와 정책점검 사업을 정책평가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람.
- 정책점검사업과 정책연구개발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업대상 선정과 용역 수행에 있어서 기존의 관행적 폐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예산수립 집행 선도부처로서 정책연구 용역사업의 대상 과제 선정과 예산집행과 관련, 기존의 폐단을 불식하기 위한 사항식 의사

결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정부산하기관관리사업 관련

□개요

- 정부산하기관관리사업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 내년도에는 금년도(1억 원)에 비해 134% 증가한 2억 3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
- 내년도에 대폭 증가된 사유는 종전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담당하던 산하기관경영혁신점검평가사업(1억 3200만 원)을 동 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정부산하기관관리사업에 계상한 데 따른 것임.

정부산하기관관리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백만 원)

구분	2003 예산	2004 예산안	내년도 추진계획
계	100	234	
산하기관관리 관련경비	50	52	○자료발간, 관련회의 개최 등 (연중 실시)
자료유인비 등	(21)	(24)	
운영위원 운영수당	(3)	(4)	
운영위원 간담회	(26)	(25)	
산하기관 경영평가 관련 용역비	50	50	○경영평가 지표개발 용역 (04년 상반기)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안	내년도 추진계획
산하기관 경영혁신 점검/평가		132	점검평가단 구성을 통한 경영 혁신 점검과 실시 * 정산법 제정시 동법 평가방식 경비로 전환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동 사업에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제정에 대비하여 동 법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인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도와 내년도에 각각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정부 산하기관은 그 특성상 형태와 종류 및 기능이 다양하여 평가 지침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모든 산하기관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본 위원은 기획예산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별도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가에 대해 기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음.
- 기획예산처는 기존의 프로세스, 즉 정부부처 예산심의 시에 정부산하기관의 예산지원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으며, 예산조정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평가를 할 근거가 없으며,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마땅

할 것임.

-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은 무엇인가?
 - 게다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라는 법까지 제정해서 기획예산처의 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것인지?
 - 정부산하기관의 통폐합과 경영합리화는 지난 1996년부터 시작돼 IMF 위기 발생 후 기획예산처가 공기업 구조조정에 전력, 최근들어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은 오히려 방만해지고 있는 추세
 - 기획예산처와 정부 부처들의 직무유기 성격이 강한데 이를 법까지 제정해 가면서 기획예산처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조직 및 인력 관련
- 개요
- 기획예산처 2004년도 인건비는 총 159억 5200만 원으로 금년도(144억 9600만 원)에 비해 10.0%(14억 5600만 원) 증가되었음. 증가는 기본급 3% 인상 등 공무원의 처우개선(3%), 기획예산처 예산상 정원의 증가(2.7%), 그리고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소요(4.3%)에 기인한 것임.

99년 이후 기획예산처 예산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예산안
인 건 비	7,744	9,028 (16.6%)	10,421 (15.4%)	13,226 (26.9%)	14,496 (9.6%)	15,592 (10.0%)
사 업 비	10,154	9,936 (△2.1%)	10,357 (4.2%)	11,212 (8.3%)	11,656 (4.0%)	11,856 (1.7%)
기본사업비	6,566	6,112 (△6.9%)	7,203 (17.9%)	8,009 (11.2%)	6,740 (△15.8%)	6,972 (3.4%)
주요사업비	3,588	3,824 (6.6%)	3,154 (△17.5%)	3,203 (1.6%)	4,916 (53.5%)	4,884 (△0.7%)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예산안
합 계	17,898	18,964 (6.0%)	20,778 (9.6%)	24,438 (17.6%)	26,152 (7.0%)	27,808 (6.3%)

※2002년도는 기금정책국 신설(정원 43명 증원)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을(19억 88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임.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이러한 2004년도 기획예산처 인건비 증가율(10%)은 정부 전체 인건비 증가율(7.1%)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이는 별도 정원을 비롯한 인원증가(13명)에 따른 것임.

정부 전체와 기획예산처 인건비 비교
(단위 : 억 원)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정부전체 인건비	226,801	242,995	16,194	7.1%
기획예산처 인건비	145	160	15	10.0%

-이 중 별도 정원의 증가(7명)는 금년도에 이미 늘어난 별도 정원의 소요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2003년 10월 현재 기획예산처 별도정원은 직제상 정원(293명)의 15.7%인 46명으로,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기획예산처 별도 정원 추이
(단위 : 명)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 10월
정 원	248	248	291	293
별도정원	35	41	43	46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별도 정원의 경우 청와대 TF팀 파견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효율적인 정원관리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 별도정원과 관련, 파견인력 등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람.
-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인력은 1999년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예산도 확대 추세
- 신생조직이라고는 하나 조직과 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가급적 지양돼야 할 것임.

-조직 및 예산의 연도별 변화 내역과 향후 개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尹鐵相 委員

(중앙인사위원회)

□연구용역비 과다 책정의 문제

○2003년도 연구용역비 집행액 예산현액 8억 500만 원 14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함. (1건당 5800만 원)

○2003년도 연구용역비 예산편성액 8억 200만 원으로 12건의 연구과제 추진계획 (1건당 6700만 원)

○2004년도 연구용역 과제 1건당 평균 용역비가 2003년도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인데, 이는 최근 4년간 다른 부처의 1건당 평균 용역비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나고 있음.

-재정경제부(3900만 원) 보다는 1.7배가 높고, 기획예산처(2600만 원) 보다는 2.5배가 높은 수준임.

○2002년도의 중앙인사위원회 연구용역사업과 같은 연도의 다른 부처의 연구용역사업의 건당 용역비를 비교해 봤을 때, 대통령비서실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배, 기획예산처와는 1.9배, 또한 2004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획예산처보다 2.7배가 높게 나타났음.

각 부처 간 연구용역비 현황

부 처	연도	사업명	예산액	용역 건수	건당액
중앙인사위	2002	연구용역	785	15	52
대통령비서실	2002	연구용역	84	5	17
기획예산처	2002	정책점검 사업	199	7	28
과학기술부	2002	정책연구 사업	1,302	28	46
중앙인사위	2004	연구용역	802	12	67
기획예산처	2004	정책연구	400	16	25

중앙인사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용역비가 다른 부처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 철저한 준비 필요하다
-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은 정보화 국제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 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금년의 6억 5800만 원 대비 2억 8800만 원이 감소한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

이러한 감소는 중소기업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금년도 4억 3400만 원에 비해 2억 1000만 원이 감소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정책연구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안	증감액
기타직 보수	30	32	2
관서운영비	103	27	△76
여 비	10	6	△4
업무추진비	81	81	-
연구용역비	434	224	△210
합 계	658	370	△288

- 그리고 2004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정책개발비가 2억 23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음.

그런데 금년도 중소기업정책연구용역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면, 연구용역사업이 처음 계획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2003년 연구용역 과제 계획에 있었던 7가지 연구 주제는 전혀 실행하지 않고, 계획과 전혀 다른 주제로 9가지 연구를 실행 중인 것임.

※별첨1. 2003년도 연구용역 과제 계획과 집행 현황(9월 말) 비교

이러한 현상은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 확보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동 정책 연구용역 비용을 보면, 2003년에는 총 9건에 2억 4320만 원의 비용이 들어 건당 평균 2700여만 원이 사용되었음.

※별첨2. 2003년도 중소기업정책연구용역 과제

추진현황

그런데 2004년도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보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방안’ 연구에 5521만 7000원,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진출 방안’ 연구에 5637만 2000원 등이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어, 총 5건에 2억 2350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음.

※별첨3. 중소기업정책연구용역 2004년도 추진 계획

이는 건당 4470만 원 정도로 올해의 2700여만 원 보다 약 66%가 많게 책정된 금액임. 이는 동 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현지 법인 수가 2만 2000개이고, 이들 기업이 중국에서 창출한 일자리가 100만 개에 이를 것이라 추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내의 제조업은 기반이 흔들릴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음. 중국에서 창출한 100만 개의 일자리는 국내의 임금 체계를 기준으로 할 때 10만 개의 일자리가 중국으로 옮겨 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임.

물론 국내 기업인의 중국 투자는 중국과의 경제거래 확대로 수많은 일자리가 국내에 새로 생기게 될 것임. 하지만 국내의 기업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어제 오늘 지적된 사항이 아님.

그리고 이로 인해, 국내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따라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설립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에 있어서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목적과 국회에서 심의 받은 내역에 맞게 연구용역 과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별첨1. 2003년도 연구용역과제 계획과 집행현황(9월 말) 비교

연번	2003 계획	2003 집행현황
1	중소기업 지원 기관 및 관련 단체의 역할과 성과 및 발전방향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평가와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2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현황 평가 및 발전방향	중소기업 시책평가 지표개발 (창업보육지원사업 분야)
3	중소기업 해외진출 현황 및 지원 연계성 강화 방안	중소기업 시책평가 지표개발 (지방중소기업 육성 시책 분야)
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수출 확대 방안	중소기업 시책평가 지표개발 (정보화지원사업 분야)
5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정부 및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활동 지원 현황 비교조사 연구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위험 DB 구축방안
6	벤처기업 지원 시책 조사·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7	도하 아젠다(DD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
8		지식이전을 통한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 제고 방안
9		2만 불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선진형 생산구조 구축방안

※ 별첨2. 2003년도 중소기업 정책연구 용역과제 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과제)명 및 내용	용역기관	연구기간	계약금액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평가와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3. 4~ 9(5월)	29,750
중소기업 시책평가 지표개발 (창업보육지원사업 분야)	산업연구원	03. 6~11(5월)	22,000
중소기업 시책평가 지표개발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 분야)	성균관대학교	03. 6~11(5월)	22,000
중소기업 시책평가 지표개발 (정보화지원사업 분야)	(재)중소기업진흥재단	03. 6~11(5월)	21,981
중소기업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위험 DB 구축방안	한국신용위험컨설팅(주)	03. 5~11(6월)	29,989
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사)한국규제학회	03. 7~10(4월)	29,700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	한국여성개발원	03. 8~12(4월)	29,800

사업(과제)명 및 내용	용역기관	연구기간	계약금액
지식이전을 통한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제고방안	(사)한국정책학회	03. 9~12(3.3월)	28,995
2만 불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선진형 생산구조 구축방안	한국생산성본부	03. 9~12(3.3월)	28,985
합 계	9건		243,200

※별첨3. 중소기업정책연구용역 2004년도 추진계획

제 목	예 산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방안	55,217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진출 방안	56,372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37,316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 병행실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33,056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책 현황 실태조사	41,545
계	223,506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의 문제점

2002년도의 이월과 전용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함.

기획예산처 2002년도 자체 예산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249억 1600만 원 가운데 불용 및 이월액은 15억 7000만 원(6.3%)임.

그런데 2004년 자체예산 편성액을 보면, 278억 800만 원으로 2003년도 예산액(261억 5200만 원)보다 16억 5600만 원이 많아 6.3%의 증감률을 나타냄.

그러나 2002년도 지출액(233억 4600만 원)과 2004년도 예산액(278억 800만 원)을 비교해 본다면 44억 6200만 원으로 19%가 증액되었음.

기획예산처장관께 물겠음.

당해연도에 책정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이나 이월시키고 있는 데도 과대한 증액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또 다시 예산의 이·전용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중복 예산편성의 문제점

유사한 사업을 분산시킨 중복 사업 예산편성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함.

1. 국제기구정책자문사업(2004년 예산 4억 8000

만 원)

○이 사업은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전문기관이 한국의 중요 정책과제에 대해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자문을 하는 사업임.

○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기구와의 공동참여를 통한 예산(공공부문 자원배분)·정부혁신 부문의 핵심 정책개선 과제의 개발 및 구체적인 실천 방안 도출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WBI(World Bank Institute)와 재정·공공 부문에 대한 정책자문·협력사업

2. 정책연구개발사업(2004년 예산 4억 원)

○이 사업은 기획예산처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정책개발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정책과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계약직 연구원 채용경비임.

○2002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재정의 역할과 정책과제(계약자: 한국개발연구원), 재정 운용평가 및 중장기 재정운용 방향(한국개발연구원), 주요국의 재정제도에 관한 연구용역(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재정기초 측정지표개발(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3. 국제협력사업(2004년 예산 3억 9700만 원)

○이 사업은 소속 공무원의 주요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국제환경과 선진국의 축적된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경제 현안의 문제해결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과건 공무원의 주택임차보조금, 여비, 의료보협료, 국제부담금, 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 국제기구 파견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IBRD(미국 세계은행)	2	3
아시아경제연구소(일본)	1	1
OECD(프랑스)	1	1
주미대사관	1	1
합 계	5	6

4. 예산제도개선사업(2004년 예산 5억 8400만 원)

○ 이 사업은 급속히 변화하는 재정운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운영기법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임.

○ 세부적으로 OECD 등 국제기구와 재정운영제도 관련 협력활동 추진과 주요 선진국 예산제도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 예산편성 절차, 예산구조 개편 등 재정개혁 현안 과제에 대한 국제 공동프로젝트 수행 등임.

기획예산처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추가한 예산제도개선사업을 비롯한 네 가지 사업의 목적과 2002년도 사업실적을 비교해 보면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네 가지 사업을 국제 협력사업과 정책연구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중복예산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 바람.

○ 이병석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 인사권 일원화와 관련하여

○ 최근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은 현재 중앙인사와 행정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권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인사는 인사행정과 관련한 전략적 정책개발과 집행, 고위공무원의 집중 관리, 그리고 부처 인사운영에 대한 지원·평가 및 환류 기능이 강화되어 인사권에 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됨.

○ 그러나 문제는 현재 중앙인사의 소속이 대통령에게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음.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행정부 내 개혁주체 세력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개혁주체 세력 구축의 방안으로

소위 주니어보드(중간간부회의)를 언급한 바 있음.

[참고자료]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정부부처 내 공식, 비공식 개혁세력 구축’을 언급하며 개혁구축의 수단으로 ‘인사권’과 ‘감사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음.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전날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은 김병준 위원장과 정찬용 인사보좌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노대통령을 만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법개정 이후, 대통령의 의중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소위 코드를 같이 하는 인사가 중앙행정기관 내에 중용되어 대통령 및 청와대와 직접 연결되는 세력을 구축할 경우 공직사회의 근간이 되는 직업공무원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

○ 결국 이런 정황은 직업공무원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인사의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고려해야 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독립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수행의 일관성과 독자성을 유지하고 정권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제도화한 것임.

○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인사의 공정성, 객관적 직무평가, 그리고 소신 있는 업무수행을 북돋워 줄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함.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개혁주체 세력의 구축은 또 다른 줄서기를 통해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막강한 인사권의 행사와 개혁주체세력 간의 관계 설정과 관련한 중앙인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국가인재DB사업과 관련하여

○ 중앙인사위원회는 자격, 능력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고 민간 전문가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9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음.

내년에는 금년 예산 9900만 원 대비 무려 160.6%가 증액된 2억 5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

03년 7월 말 현재 국가인재 DB 구축 현황은

현직 공무원 2만 6828명, 전직 공무원 1만 9440명, 민간인 2만 6162명 등 총 7만 2430명에 달함.

○그러나 연도별 활용실적을 보면, 00년 47건(1461명), 01년 34건(721명), 02년 61건(559명), 03년 5월 현재 39건(794명)에 그쳐 활용 실적이 극히 저조함.

○인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DB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재 DB의 활용도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홍보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용자들이 정보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됨.

○국가인재DB의 정보가 이용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용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개인의 학력, 경력 등 단편적인 정보를 질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면평가의 내용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능력, 정책성향, 가치관, 자질 등 공직적합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평가가 필요함.

○학력, 경력 등의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학연, 지연 등을 바탕으로 하는 또 다른 엘리트주의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 인재 DB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가?

○국가인재DB사업은 그동안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새로운 인재정보의 발굴은 고사하고 자료의 기본적인 갱신(업데이트)작업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동안 자료입력요원 2명을 제외하고 2명에 불과하던 전담인력을 올해 들어서 14명으로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재 D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증원하고 인력운영, 하드웨어 구축,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가인재 D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 긴급요

○지난 70~80년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소위 사회·경제 전반에 부상한 대기업의 화려한 업적 뒤에는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있는 중

소기업의 협력과 희생이 바탕이 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같은 논리로 향후 21세기 발전의 핵심원동력인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클 것이고, 따라서 증기특위 역시 앞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함.

○그러나 2004년 증기특위 예산을 보면, 증기특위가 스스로의 위치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증기특위는 내년도에 총 18억 51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금년도 25억 8700만 원에 비해 무려 28.4%나 감액되어 편성되어 있음.

특히, 기본사업비가 5.8% 감액된데 비해, 주요사업비는 무려 35.6%가 감액되어 증기특위의 주요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증기특위의 중요성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이같이 편성된 것은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본시각이라고 이해해야 하는가, 아니면 증기특위가 지난 5년간 스스로의 자리를 찾지 못한 결과인가?

○내년도 주요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정책연구 및 평가, 전국중소기업인대회, 정책자금안내시스템 등 각각의 사업은 증기특위 고유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서 이미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증기특위는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조정'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등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유사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앞 다퉈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완화를 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의 벽은 높은 것이 현실임.

○위원장께서는 지난 4월 10일 증기특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현행 45개로 지정돼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정계열화업종도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체제로 전환할 것을 보고한 바 있음.

○물론 이러한 정책이 이상적인 모델일 수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협력체제가 보장받지 못하는 국내 업계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방패막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들의 폐지를 제안하는 것은 결국 중소기업이 애로를 정책에 반영하는 증기특위 본연의 목적에 위배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볼 때, 중기특위는 스스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최근 참여정부는 지방혁신과 분권에 관한 3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지방화, 분권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지역 균형개발과 관련하여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 시키기 위한 실천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지역 균형개발 성공의 핵심적인 사항일 수 있음.

이제 지역 균형개발은 중기특위의 핵심적인 사업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관계기관 간 정책 조율 및 조정이 중기특위의 주 업무라면, 이제 중기특위가 해야 할 일은 전시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조정기능을 발휘해야 할 시점임.

○크게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작게는 중기특위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지역 균형개발과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술인력의 양성에 조직의 전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기획예산처)

□예비비 편성과 관련하여

○정부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및 심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대하여 그야말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하는 것으로서, 매년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9% 수준에서 결정되는 일반예비비와 재해대책 예비비 등에 소요되는 목적예비비로 구분되어 있음.

○2004년 정부 예비비 계상 현황을 보면, 금년 4조 314억 원에서 1조 4334억 원이 감액된 2조 598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2002년 재해대책예비비 당초 예산액은 1조 30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추경을 거치고 난 최종 지출결정액은 4조 9446억 원이었음.

이런 경향은 금년에도 비슷해서 2003년의 경우, 관련 예산규모가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최근 2차 추경 이후 3조 원이 증액되어 4조 400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음.

○통상 일반회계의 2~3% 수준에서 예비비가 결정되는 것은 알고 있으나, 매년 추경편성의 주요인 중 하나가 이른바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감안할 때, 예비비 중 재해대책예비비를 현실에 맞게 늘리는 것이 피해복구에 대한 신속한 대처라는 측면과 되풀이되는 추경편성 관행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관련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공청회에서 정부산하기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된 바 있음.

[참고자료]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산하기관운영위원회구성

- 기획예산처장관(위원장), 주무부처 공무원 → 이상 당연직

-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0인

○산하기관은 경영실적 자료를 매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주무기관의 장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인사 또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산하기관은 조직 또는 정원 조정이 있을 경우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조직 또는 정원이 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자치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

○산하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경영공시제도를 도입

◇그런데 법안의 내용대로라면 기획예산처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평가 주체가 되어 이들의 경영성과를 다양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 있어서 지나치게 획일적인 잣대, 즉 ‘철저한 수익성 위주’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기관 특성에 따른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산하기관에도 역시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경우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그동안 정부산하기관은 낙하산 인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

에는 이와 관련한 강력한 규정이 준비되어야 함.

◇그러나 동 법안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기관장의 낙하산인사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시민단체와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장관께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이승철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및 국가인재 DB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인사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스템 구축이 내년에 완료됨에 따라 이제부터 중앙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사용이 정부부처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2004년 전자인사시스템 관련 예산에 시스템 교육이나 보안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 내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재 DB에 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7만 2323명의 인재가 DB로 구축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 여성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몇 % 정도 되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성부에서 여성인력 DB를 구축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우수 여성인력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여성부가 직접 DB를 구축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인재 DB를 여성부에서 구축하는 여성인력 DB와 연계하는 등 우수 여성인력을 활용할 방안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

200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정책연구 예산안 중 연구용역비가 50%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2003년 예산이 4억 3400만 원인데 2004년에는 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4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5일근무, 고용허가제 등 중소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연구용역비가 대폭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연구용역 과제를 보더라도 다소 현실에 안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5일근무제와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된 것이 벌써 오래 전인데 그와 관련된 용역과제는 2004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년 용역과제 중 '2만 불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 조업의 선진형 생산구조 구축방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은 살아남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2만 불 달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정책이 상당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도 같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연구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용역과제 선정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

□정부산하기관관리사업

정부산하기관관리사업의 목적은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현재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공청회도 있었고 법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안에도 법안 통과에 대비해서 23억 4000만 원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

하고 내년 예산과 관련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산하기관 평가 관련 용역비가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정해졌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평가방법, 즉 평가지표가 기관마다 확일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려면 연구용역이 좀더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할 텐데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정부산하기관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들도 아니고 예산의 규모, 대국민서비스의 종류, 민간 경쟁 업체의 존재 유무 등 그 유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둘러 법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은 후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규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연구용역비 적정성 검토를 면밀히 해야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의 인사개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인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분석을 위해 1999년 설립 이후부터 이를 위해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총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총 63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연도별 예산 대비 연구용역비

(단위 : 백만 원, %)

구분	전체 예산액	연구용역 예산액	연구과제 1건당 평균계약 금액	비율	연구용역 발주건수
1999	4,055	501	39	12.4	15
2000	5,354	830	53	15.5	15
2001	6,002	842	54	14.0	18
2002	6,918	830	52	12.0	15
계	22,329	3,003	48	13.4	63

그러나 타 기관과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용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2년도의 경우 여성부와 기획예산처의 1건당 용역발주 평균금액을 살펴보면 여성부는 2250만 원, 기획예산처는 1750

만 원인데 반해 중앙인사위원회는 총 63건에 1건당 평균 4800만 원으로 여성부와 기획예산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분	연구용역 발주건수	계약금액	1건당 평균 계약금액
여성부	16건	3억 5900만 원	2250만
기획예산처	19건	3억 3721만 원	1755만

또한 연구과제의 질 높은 연구 결과가 수반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상반기에 발주하여 충분한 연구기간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하반기에 용역발주를 한 건수가 전체 63건 중 4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특히 8월 이후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OECD 국가의 정부규모에 관한 연구'의 경우 12월에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도 불과 20일인 것으로 조사됨.

○이에 본 위원은 인사개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연구용역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연구 기간이 짧아 용역과제의 질적인 수준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혹시 이런 과제들이 실제로 부실화되지 않고 적절히 이용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부처나 일반 사회분야의 일반적인 연구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계약금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앞으로 이들 두 기관과 유사한 수준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

□과약조차 힘들만큼 많은 지방산업정책 교통정리가 시급

“중앙정부의 산업과학기술 정책을 따라가다 보면 정신분열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이 말은 얼마 전 신문(5월 22일,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한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실장의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각종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중복돼 추진되는 까닭에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가야만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태임.

○지금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추진 중인 특구관련 정책과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 부처의 거점육성사업만도 몇 개 지역에서 몇 개나 시행되고 있는지 장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의 알고 있는 것만 말해도 3개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관세자유지역, 13개 시·도의 22개 관광특구, 4개 지역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지역발전특구 여기에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수십개의 산업클러스터까지 더한다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지역산업개발정책이 있음. 또한 거점육성사업의 경우도 과기부의 지역연구센터, 산자부의 기술혁신센터, 테크노파크, 교육부의 BK21 등 역시 수십개에 이르고 있어 파악조차 힘든 상황임.

○본 위원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수십 개의 각종 정책이 중복돼 추진됨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집행에 있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혼선과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이렇게 많은 정책이 중복 시행되는 것이 과연 지방산업개발정책의 본연의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와 더불어 이렇게 헤아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정책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全甲吉 委員

(중앙인사위원회)

□이른바 효율적인 정부론에 대하여

○문제제기의 이유

-작금의 대통령지지도 하락으로 나타난 통치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하여 통치권자는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정국이 혼란스런 상황임에도 대통령의 참모 조직인 비서실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비등해 지고 있는 현실임.

그럼에도 2004년도 대통령실 소관 세출예산액의 경우 573억 5700만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463억 6400만 원) 대비 23.7%인 109억 9300만 원이 증액계상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은 비

서실의 인건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이제는 참여정부가 설정해 놓은 작은정부 대신 효율성 있는 정부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됨.

예컨대 대통령비서실의 최근 예산 규모의 변동 추이를 보면 2001년 9.5%, 2002년 5.5%, 2003년 3.8% 증액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참여정부가 효율성 있는 정부를 표방한 이후에는 전년 대비 6배 이상으로, 예산증가폭이 상승하고 있음.

이는 향후 정부 전 부처에 효율성을 이유로 조직이 비대해지고, 인건비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임.

○질의 사항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효율적 정부라는 미명하에 저비용 고효율의 작은 정부를 외면한 채 조직을 비대화시키는 현상은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지난 2월 참여정부 들어서 조직의 경량화보다는 효율화라는 명제하에 실시한 청와대의 93명 증원 조치는 이 같은 국민적 지지도 하락이라는 불량한 실적 앞에 그 효율성의 명제가 허상이었다는 것으로 명백히 증명되었음.

당시 대통령실 직제개편에 대하여 중앙인사위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향후 정부의 효율적 기구개편에 대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를 시정 권고할 의지는 없는지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구축사업 관련

◇현황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구축사업은 모든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모든 인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인사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는 사업으로, 인사권자에게는 적재적소 인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이 PPSS사업은 2000년 10월 착수한 이후 2001년 9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여 4개 부처(중앙인사위, 기획예산처, 농림부, 농진청)에 시범 적용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31개 중앙부처에 대한 구축을 완료,

2003년에는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16개 중앙부처에 추가적으로 보급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시스템구축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연도별 구축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예산	총사업비	1,050	10,576	10,242	968
	본사업비	1,050	10,396	9,646	-
	운영경비	-	188	596	968
대상기관		4개 부처	31개 부처	16개 부처	

※본사업비는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충당된 금액이고 운영경비는 중앙인사위원회에 계상된 예산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사업 2004년도 운영경비 예산안은 9억 6800만 원으로 이는 2003년도 운영경비 예산(5억 9600만 원)보다 62.5% 증가(3억 7200만 원)하였는데, 이는 51개 중앙행정기관에 보급 완료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사업에 대한 전산장비 및 응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질의 사항

○그런데 적지 않은 자금이 투입되어 구축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그 기능을 다하고 구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동 시스템이 전 부처로 확산되어 원활하게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 담당자의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못하고, 시스템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인사입력 자료의 DB화 지연 및 인사담당자 업무 부담에 따른 사용의지 부족 등의 이유로 기록관리 및 통계자료 산출 위주의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는 일부 부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따라서 동 시스템의 활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보완과 함께 시스템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중앙인사위원회에서의 PPSS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정책연구개발사업 관련

◇현황

○정책연구개발사업은 정부의 인사개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21C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사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인사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분석을 토대로 인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정책연구개발사업은 2004년도에 인사정책, 급여정책, 성과관리 및 정보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12개 연구과제의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도 연구용역비 예산안은 인사정책에 관한 연구(4건) 3억 1000만 원, 급여정책에 관한 연구(4건) 1억 9500만 원,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3건) 2억 5300만 원 및 정보관리에 관한 연구(1건) 4400만 원으로 총 8억 200만 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예산(8억 500만 원)보다 0.4% 감액되었음.

◇질의 사항

○2004년도의 연구용역비는 총 12건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연구용역 과제 1건당 평균 용역비가 금년도의 5800만 원 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재정경제부(3900만 원) 보다는 1.7배, 기획예산처(2600만 원)보다는 2.5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과제당 연구용역 예산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이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견해를 답변 바람.

○또한 용역 예산액이 배정되면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 한 100% 지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후 실적 평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용역사업 전반에 관한 회계관리와 정책개발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실제 정책수립에 반영되는가 하는 성과에 대한 평가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따라 그 평가결과를 다음 번 용역대상 선정작업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다음 페이지에 계속)

2004년도 연구용역 과제 및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연 구 용 역 과 제	예산안
합 계	12건	802
인사정책 (4건)	주요 외국의 정무직공무원의 임용기준, 방법, 절차에 관한 연구 공무원 직종 구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부처별 자율채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인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 조정방안 연구	310
급여정책 (4건)	2004년 민관 보수 실태조사 중장기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수립 및 공무원 보수제도 개편을 위한 제도 연구 공직사회 연봉제 확대 방안 공무원 급여 포털사이트 개발용역	195
직무분석 (3건)	처, 청, 위원회 고위직 직무분석 부처 성과관리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분석 실시 직위분류제 도입모형 연구	253
정보관리 (1건)	홈페이지 및 정부인사포털사이트 개편	44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시책사업 예산 관련

-중복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피해야 한다.

◇현황

○2004년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전체 세출예산안 규모는 18억 5100만 원으로 2003년도 예산(25억 8700만 원) 대비 28.4%(7억 3600만 원) 감소하였으나, 외부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

여 각 중소기업들을 평가하고, 이때 얻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의 우선순위 결정 및 중복지원 방지 조정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은 지난 2003년도 1억 1000만 원에 비해 무려 635%(5억 8800만 원) 증가한 6억 9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음.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3 예산	2004 예산안	증 감 액
시책평가단 운영 및 시책 실태조사(관서운영비)	105	20	△85
시책평가단 간담회(업무추진비)	5	5	-
해외중소기업지원정책시스템 조사 등(여비)	-	12	12
시책평가 및 예산사전조정 관련 연구용역	-	661	661
합 계	110	698	588

○그런데 동 사업의 큰 폭의 증액은 '시책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관련 연구용역'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기 때문임.

◇문제점 및 질의 사항

그런데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에 신규로 계상시킨 연구용역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200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예

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음.

예컨대 중소기업청의 연구용역의 과제명은 ‘중소기업 장기 발전전략과 비전’으로 그 연구과제 내용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연구용역 내용과 같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평가, 중소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은 큰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중기특위 연구용역과 중기청 연구용역 비교 내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과제명	시책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관련 연구용역 (과제명 미정)	중소기업 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과제내용	○중소기업의 경쟁력 평가 ○중소기업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중소기업 주요지원시책 분야별 평가 - 현행 주요지원시책별 개편방안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평가 ○중소기업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중소기업 주요지원시책 분야별 평가 - 현행 주요지원시책별 개편방안 등
용역금액	6억 9800만 원(정부예산)	8억 원(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특히, 이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기본사업비를 활용하는 등, 기본 예산에서 집행하는 장점을 갖고 있기에 본 위원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연구내용이 중소기업청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중복될 시에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된다고 보는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시책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관련 연구용역’과 ‘중소기업 장기 발전전략과 비전’ 이 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기 바라며, 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 후,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기 바람.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 관련

◇현황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은 지식 정보화, 국제화, 지방화 등 외부환경 변화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적극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의 감소(2억 1000만 원 감소) 등으로 2003년도(6억 5800만 원)에 비해 2억 8800만 원 감소한 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음.

중소기업정책연구 및 평가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03 예산 (A)	04 예산안 (B)	증감 (B-A)
계		768	1,068	300
시책평가사업		110	698	588
	- 201(관서운영비)	105	20	△85
	- 202(여비)	-	12	12
	- 204(업무추진비)	5	5	-
	- 206(연구용역비)	-	661	661
중소기업정책연구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658	370	△288
	- 102(기타직 보수)	30	32	2
	- 201(관서운영비)	103	27	△76
	- 202(여비)	10	6	△4
	- 204(업무추진비)	81	81	-
	- 206(연구용역비)	434	224	△210

이러한 감소는 중소기업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2003년도(4억 3400만 원)에 비해 대폭 감소(2억 1000만 원)한데 주로 기인한 것임.

◇문제점 및 질의 사항

2003년도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3400만 원 중 9월 말 현재 56% 수준인 2억 43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연구용역사업의 추진현황(아래 표 참조)을 보면, 2003년도 연구용역사업 계획 중 계획한 바와 같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 이는 연

구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사전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003년도 연구용역과제 계획과 집행현황(9월 말) 비교

연번	2003 계획	2003 집행현황
1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관련단체의 역할과 성과 및 발전방향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평가와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2	소기업·소상공인지원 현황평가 및 발전방향	중소기업 시책평가 지표개발(창업보육지원사업 분야)
3	중소기업 해외진출 현황 및 지원 연계성 강화 방안	중소기업 시책평가 지표개발(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 분야)
4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현황과 수출 확대방안	중소기업 시책평가 지표개발(정보화지원사업 분야)
5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정부 및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활동 지원현황 비교조사 연구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위험 DB 구축방안
6	벤처기업 지원시책 조사·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7	도하 아젠다(DD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
8		지식이전을 통한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 제고 방안
9		2만 불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선진형 생산구조 구축방안

2004년도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이 삭감 계상된 것은 이러한 예산집행에 있어 상이함 때문으로 보는데, 연구용역사업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바, 이는 위원장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책자금안내시스템 관련

◇현황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인 또는 예비 창업자를 위하여 정부의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자금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자금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고 싶은 중소기업인이나 예비 창업자들은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하여 정책자금 정보를 통합하

여 중소기업인 또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중소기업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시스템을 정책자금안내시스템이라고 함.

○이러한 정책자금안내시스템은 2001년 12월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시험운영을 마친 후, 2002년 9월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하였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예비 창업자 및 중소기업자들이 정책자금 관련 정보를 검색하게 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관련 정보를 알려 주고 있으며, 또한, 신규자금 등 정책자금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가 등록될 때마다 사용자에게 E-mail로 통보하여 주며, 정책자금 검색과 병행하여 온라인상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창업예정자나 중소기업자가 자금 조달 등과 관련된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고 있음.

○이 시스템에 대한 2004년도 예산은 2003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04년 정책자금안내시스템의 보안과 운영을 위한 경비로 계상된 것임.

◇문제점 및 질의 사항

- 정책자금안내시스템은 지난 2002년 9월 본격 운영한 후 1년동안 접속한 수는 33만 4986명(2003년 9월 8일까지)으로 1일 평균 접속회수는 900여회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중소기업체 수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85만	278만	293만	301만	305만

그러나 이 시스템에 대해 이용 가능한 추정인원은 중소기업 수 약 300만 업체와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 50만 명 등 총 350여만 명 이상인 점을 감안할 경우 그 이용도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본 위원은 중소기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아직 이러한 제도 및 시스템 존재에 대해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기에,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 시스템을 더 많은 대상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에 대해 답변 바람.

○정갑윤 위원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중기청 예산, 과연 중기

특위는 무엇을 했는가?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경제 침체와 중소기업 경영난에도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감소하여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

2004년도 정부 세출예산안 규모 대비
중소기업청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조 원)

구 분	정부예산안 (일반회계)	중소기업청예산안 (일반회계)	점유비
2003년	115.13	1.85	1.61
2004년	117.54	1.33	1.13

04년도 중소기업청 세출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3 예산 (A)	2004 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1,849,224	1,328,303	△520,921	△28.2
□일반회계	1,849,224	1,328,303	△520,921	△28.2
○인건비	24,661	26,805	2,144	8.7
○기본사업비	19,526	19,526	-	-
○주요사업비	1,805,037	1,281,972	△523,065	△29.0

04년도 세출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대폭 확대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분야를 크게 축소된 결과임.

2004년도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03년 예산(A)	04년 예산안(B)	증감액(B-A)	증감률(%)
신용보증기금	506,000	266,000	△240,000	△47.4
기술신용보증기금	294,000	204,000	△90,000	△30.6
채권담보부증권발행지원	150,000	0	△150,000	△100.0
어음보험	30,000	10,000	△20,000	△66.7
지역신용보증재단	40,000	20,000	△20,000	△50.0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0	10,000	10,000	순증
신용보증재단원상환	0	64,600	64,600	순증
계	1,020,000	574,600	△445,400	△43.7

2004년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전출 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03년 예산	04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중산기금 전출	359,972	223,229	△136,743	△38.0

* 중산기금 중 경영안정자금은 폐지됨.

◇질의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기특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현장 애로, 각종 규제 등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안을 적시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동향 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부에 전달하고 적절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그런데 이번 중기청의 04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했고 특히 금융지원이 대폭 축소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지?

	'03.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가동률(%)	69.5	69.1	68.3	66.7	66.9	66.6
전월 대비 증감(%p)	(△0.2)	(△0.4)	(△0.8)	(△1.6)	(0.2)	(△0.3)
전년 동월 대비 증감(%p)	(△5.7)	(△6.1)	(△6.4)	(△6.8)	(△5.5)	(△5.6)

- 이러한 상황에 중소기업청의 04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도 줄고 금융지원도 대폭 삭감. 이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
- 본 위원은 이렇듯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 편성은 중기특위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파악하고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 중소기업특위가 6월에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4년 중소기업 지원예산 편성 의견'에 보면 중소기업의 자생적 기반이 확충될 때까지는 현재 수준의 직접적 지원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전체적으로 2003년도 지원예산 대비 소폭(3.0% 수준) 증액을 권고했는데 맞는지?

지금 현실은?

- 2/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98년 4/4분기 이후 최저수준 '2003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 (한국은행)
- 소비자 체감경기 98년 조사 이래 최악 '9월 소비자 전망조사' (통계청)
- 이러한 경기침체는 그대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과 경영난으로 이어짐.
-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량기업에 집중, 신용도 낮은 중소기업은 애로를 겪는 양극화 발생
-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도에 따른 여신관리 강화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 사정은 오히려 악화

자금 사정 지수	02. 12	03. 3	03. 6	03. 7	03. 8	03. 9
	91.0	91.4	82.5	79.4	78.3	77.7

- 또한 2003년 9월 중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은 금년 2월 이후 8개월 연속 60%대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그런데 왜 이러한 중소기업특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는지? 또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 결과적으로 중소기업특위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심의, 조정,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된 중소기업특위 존립 자체를 흔드는 중요한 문제,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
- 또 다른 하나로 경영안정자금의 대폭 축소를 권고했는데 맞는지? 경영안정자금을 폐지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좋아졌다고 판단한 건지?

-시중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 사정은 오히려 악화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03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긴급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초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증액하여 4500억 원으로 증가했을 정도로 수요가 많은 자금

○장기적 측면의 중소기업 정책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자율과 경쟁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기조에는 동의. 하지만 현재와 같이 경기가 좋지 않아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중기청의 예산 축소와 금융지원의 대폭적인 감소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예산편성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 중기특위에 계도 책임이 있음.

금융지원을 줄이더라도 차후 경기가 안정되면 조금씩 조금씩 경쟁력 향상과 상대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됨.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길.

□이공계 진출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중기특위 5급 이상 이공계 비율 11명 중 1명 (9.1%)

-중소기업의 정책을 조율하는 중기특위의 경우 과학기술 마인드를 갖추어야

얼마전 '이공계 출신 공직진출 확대방안'이 발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음.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이공계 비율은 초라함.

중기특위 5급 이상 이공계 현황

(2003. 10월 현재)

계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고졸이하	이공계비율
11	9	1	1	9.1%

◇질의

○현재 우리나라의 이공계 위기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우리 사회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

-다른 대학 의과대, 한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올해 1학기 서울대 공과대학을 자퇴한 학생은 모두 52명(작년 같은 기간 3명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 올해 1학기 서울대 자퇴생은 모두 236명, 그 중 공대생(88명)이 가장 많아.

-자연계 수능 지원 인원이 96년 35만 명에서 2002년 20만 명 이하로 급감(대학교육협의회, 2002. 2.)

-그 결과 이공계 대학 경쟁률도 95년 1.4대 1에서 2001년에는 0.7대 1로 낮아졌고, 국내 유수의 공대에서도 미달사태 발생.

연도별 수능시험 지원자 현황

(단위 : 명, %)

	1998	1999	2000	2001	2002
인문사회계	428,064 (48.3)	426,423 (49.1)	466,423 (52.1)	481,027 (55.2)	416,700 (56.4)
이공계	375,023 (42.4)	346,736 (39.9)	310,105 (34.6)	256,608 (29.4)	198,963 (26.9)
예·체능계	82,234 (9.3)	95,484 (11.0)	119,366 (13.3)	134,662 (15.4)	123,466 (16.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부처에서부터 솔선수범해야. 하지만 정작 이러한 이공계 활성화 분위기 속에 중기특위는 혹시 중기특위 5급 이상 직원 중 이공계 비율이 얼마인지 아는지?

-5급 이상 11명 중 1명(9.1%)

○중기특위가 뛰하는 곳인지? 각 부처 중소기업 정책을 조정 협의 평가하고 중소기업 정책 개발 및 선진화 기반 구축하는 곳. 그런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부분 제조업이나 벤처 등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

결국 이러한 중소기업을 다루는 중기특위의 과학기술 마인드 부재는 중소기업 정책 전체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이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일선의 기술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과학기술 마인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공계 문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더 나아가 21세기 우리나라 자체의 국제경쟁력의 문제.

정보, 기술, 과학의 시대에 이제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공계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보다 많은 이공계출신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공계 진출 확대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중기특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정범구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인력 DB(PPSS)에 대한 보안조치는 철저히 하여야!

◇국가인력 자료에 대한 보안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중앙인사위원회의 사업을 보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제외하면 외부용역비와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구축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국가인재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국가인재 DB를 구축하고 공무원 2만 7000여명, 민간인 4만 5000명 정도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 DB에는 5급 이상 공무원과 개별 접수된 민간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인재 등용 등 인력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던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도 종종 발생하는 고객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2000년 3월 대통령훈령 89호를 공포하여 DB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

으나 훈령이나 보안시스템으로 100% 완벽한 보안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국가인력 DB가 나이스처럼 온라인 시스템은 아니지만 어떤 시스템도 항상 정보유출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보유 자료를 보면 학력, 경력뿐만 아닌 언론의 인물평, 기고문, 저서, 개인의 주요 업적, 업무수행 능력 등이 기록되어지고 더구나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들의 인사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개방형직위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고위직에 등용될 가능성이 있는 민간인들의 인적사항까지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중앙인사위원장은 보안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자료의 유출을 방지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만 명 중 여성인력이 겨우 2300명?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부 자료에 따르면 인력 DB에 수록된 인력 7만여 명 중 여성인력이 겨우 2391명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국민 중 절반이 여성이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5000여명 가까이 되는데 7만 명 중 겨우 2391명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인 인력 DB에 여성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국가 고위직 여성비율도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인사위원장은 사회 각계에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과 능력이 있고 활용이 가능한 여성인력 발굴 차원에서도 더욱 많은 여성인사들의 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여성부에서는 여성인력 DB를 따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장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극복을 단기적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종합적 사업추진 계획 마련 필요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 심각해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9월 청년실업률이 6.6%로 전체 실업률의 2배에 이르고 작년에 비해 1%p 상승하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평균 가동률이 67%를 밑돌고 있으며, 제조업의 탈한국 가속화, 대

- 기업 중소기업 간 종속 심화, 인력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
-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과 청년실업 극복이 서로 유기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으로 알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획기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인력난 해소를 통해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 마련이 시급.
 - ◇ 정부정책 실효성 신뢰할 수 있으나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골자로 한 인력지원체계 재정비 및 중소기업 인력유입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역량 강화 방안 등 종합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53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실업 대책을 추진할 계획.
 - 그러나 중소기업 인력난이나 기업여건 개선, 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 때문에 다각적인 정부시책을 중기특위가 심의·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 및 육성정책이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각종 시책을 평가함으로써 보안책을 마련하는 것도 적절한 사업방향으로 판단됨.
 - 그러나 중기특위의 구체적 사업 내용과 방향을 볼 때, 중소기업 및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중기특위의 단기적·중장기적 종합 추진 계획 마련 필요
 - 중소기업 육성 및 인력난 해소 대책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이 나와야 하지만 중기특위의 2004년 예산편성을 볼 때 전혀 이러한 종합적 사업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먼저 중기특위가 확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용역 사업’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처럼 중기청과 중복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음. 중기청과 업무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뿐만 아니라 이미 중소기업과 청년실업 문제가 유기적으로 해결되어야 중소기업 문제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공통

의 과제가 된지 오래임.

따라서 중소기업이나 청년실업자 대책을 반복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손에 잡히는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할 것임.

중기특위는 2003년 시책평가사업 결과에 입각해 2004년 단기적 중점추진 방안과 중장기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과제는 중소기업 시책 평가 계획이 평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실업 극복을 2004년 중점 과제로 삼아야

- 다른 한편으로는 중점과제가 불분명하다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2003년 중소기업 정책연구사업은 중소기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용역 과제를 설정하였으나 추진실적은 상이하게 나타났음.
- 이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점과제를 선정하지 않고 백화점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됨.

따라서 중기특위의 고유 기능을 시행함과 아울러 종합적 사업계획 아래 중점 과제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중기특위의 2004년 중점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극복에 맞춰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정의화 위원

(중앙인사위원회)

- 2004년도 중앙인사위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94억 700만 원으로, 2003년도 78억 1000만 원보다 1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5%
 - 2004년도 정부 전체 예산안 규모 117조 5429억 원 대비 중앙인사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0.008%에 불과함.
- 부분별 재원배분 현황
 - 인건비는 45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5300만 원(23.1%)이 증가(정원 22명 증가에 기인함)
 - 기본사업비는 38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200만 원(10.5%)이 증가(인재조사과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 및 기본사업 추진 경비 증가)

-주요사업비 9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200만 원(62.4%)이 증가
(51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중앙인사관리시스템 보급 완료에 의한 장비 및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기인함)

□매년 과다 계상되고 있는 관서운영비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서운영비 집행실적이 저조해 예산 전용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요, 위원장님, 올해 동 사업의

예산집행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 2003년 8월 말 현재 집행률이 58.5%(11억 원)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동 예산의 7.3%에 해당하는 1억 3800만 원이나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수년간 계속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사업 집행률이 다소 개선되어 간다고 느꼈는데, 올해 또 다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도별 관서운영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예산액	전 용 증감액	전용률 (%)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예산액 대비)	불용액
2000년	1,504	△69	4.6%	1,434	1,028	71.7%	68.4%	406
2001년	1,591	△231	14.5%	1,360	1,301	95.7%	81.8%	59
2002년	1,848	△35	1.9%	1,813	1,683	92.7%	91.1%	130

중앙인사위원회의 전체 불용률은 약 4% 수준인데, 유독 이 관서운영비의 불용률은 전체 불용률의 2배가 넘고, 금액면에서도 전체 불용액의 반(1/2)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집행실적이 부진한데도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4년도 예산안도 2003년 대비 3.8% 증가) 굳이 과거의 부진했던 집행실적을 말하지 않아도 올해의 집행상황을 감안해 볼 때, 과다계상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인사기능 일원화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현행 제도를 보면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의 기본정책 수립 및 개혁사무를 총괄하고, 행정자치부는 그밖의 인사 관련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책과 집행이 분리돼 있어 많은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과정에서 행자부와는 별반 이견이 없

었습니까?

지난 10월 29일엔 정부 인사정책의 일원화를 놓고 팽팽히 맞서온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자부 인사국 직원들이 함께 워크숍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기능 통합과정에서 불거졌던 양측 간의 양금을 씻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해당 부처 직원들 간의 정보와 의견교환인 만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은 연말쯤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텐데, 앞으로 정부 인사정책 관장기관의 일원화에 대비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략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구축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공무원의 채용에서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인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인사자료를 DB화해 적재적소 인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라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지난해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 2003년까지 51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PPSS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다소 지체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2004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함)

PPSS 구축사업의 예산을 보면 2004년 9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7200만 원이 증가(62.4%)된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전산장비 및 응용 S/W 유지보수 비용이 다소 증가)

이처럼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구축되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 그 기능을 다하고 구축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조달청에서 전자조달 과정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정보화 마인드가 부족해 업무수행에 많은 차질을 빚곤 했는데, 그래도 단일조직이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51개나 되는 중앙부처들의 정보화 수준이 다르며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인 기관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료의 DB화가 지체되거나 인사 담당자가 업무부담을 이유로 시스템 사용을 기피할 경우도 발생할텐데, 중앙인사위에는 이들 부처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이런 문제들에 대비해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무리 편리하고 효과가 높은 새로운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PPSS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전담인력을 양성한 후, 각 부처에 일정기간 상주시켜 인사 담당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고 해당부처의 애로사항을 수렴한다거나, 인사 담당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PPSS 활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시 교육체계를 수립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인사평가 자료를 보면 단순한 업무 중심의 평가에 머무르고 있는데, 향후 개인의 임무와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체계화된 분석작업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인적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예산은, 중소기업청 소관의 두 개의 새항 <중소기업행정(1100항)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세항 1106), 중소기업육성(1300항)

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세항 1306)>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이 없음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 과연 적절한가?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청, 중기특위에서 수립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중소기업 관련 예산 약 8조 3000억 원(2003년 기준)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부서이고, 중소기업청은 사업과 정책을 병행하는 부서이며, 중소기업특위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소기업특위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기업특위에서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시책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이를 심의하여 예산 수립과정의 방향성(기술개발, 인력, 정책자금지원 등 우선 순위)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중소기업특위의 이러한 의지는 참 좋아 보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현실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한다고는 하지만, 겨우 20여명의 인력으로 내년부터 16개 부처에 산재한 195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 모두를 10개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3개월의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사업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중소기업 전 분야를 10개 분야로 구분

- 기획조정, 경영안정, 일자리창출, 인력지원, 정보화 등 구조조정, 기술 혁신, 판로지원, 지방중소기업육성, 입지 및 환경개선, 벤처 등 이뿐 만이 아닙니다.

중소기업특위의 시책평가사업이라는 것이 금년 6월부터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장기발전 전략과 비전’이라는 연구용역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주요시책에 대해 분야별로 평가하고 있는 사업의 복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중소기업청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시책평가단도 구성·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중소기업 시책을 점검할 예정인데, 중소기업특위가 똑같은 것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기획예산처의 사전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부기관 간의 예산 유사·중복 문제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에 대해서는 매년 강조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동사업은 반드시 유관 기관과의 업무 조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정보화’ 중장기 대책 준비는?

중소기업청이 현재 산자부·정통부·중기청 등으로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총괄하도록 하는 중장기 대책인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추진전략(안)’을 마련 중이라는 것을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 사업을 총괄기구를 통해 통합 운영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들과 어느 정도의 사전 협의는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직 기획안에 불과하나 곧 공청회를 거쳐 중기특위에서 심의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과연 이런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고 해도 구속력을 가질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중기특위의 확정안이 산자부나 정통부 등 타 부처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중소기업 정보를 한 기관에 총괄하도록 하는 것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들 부처들과 활발한 업무교류와 조율을 통해 향후 수립될 정보화촉진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진전략(안)상의 부처별 역할

-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사내 정보화 지원(기업 내부정보화)
- 산자부는 중소기업의 사외 정보화 지원(기업 외부정보화)
- 정통부는 공급자(IT업체) 육성 및 지원 등으로 분류·규정

○지방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정보화추진협의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심으로 하는 업종별 조합이 참여하는 업종별 조합정보화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중소기업 정보사업을 밀도 있게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

○또 이 협의회에 설치할 각 분과위원회에 산·학·연·관 전문가로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하고 성과측정지표 등을 개발해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시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하라

정부는 내년에 5400억 원의 청년실업 지원금으로 13만여 명의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시직이나마 직장연수와 인턴,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해 그들의 취업 의사와 능력을 높이겠다는 교육지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실업이 만연되면 개인적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공백이 생겨 결국엔 국가경쟁력과 나라 전체의 분위기도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에 대해 중기특위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0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중소기업에서는 20만 명에 달하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전전공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실업문제와 3D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의 괴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중기특위에서는 이렇다할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중기특위에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中央人事委員長 趙昌鉉

(김덕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예산구조 및 편성과 관련하여 04년에 하나의 세항으로 단일화된 예산구조를 심의관별로 3개의 세항으로 나누어 편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저회 위원회 예산구조는 3개의 세항(기관운영-기본사업비-주요사업비)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 2004년도에는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부

서 또는 업무성격별로 통합편성기로 한 기획 예산처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3개 세항을 1개 세항(1101 기관운영)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 이는 저희 위원회와 같이 조직과 예산 규모가 작고 예산의 성격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경비가 대부분인 기관의 경우
 - 세항 간 구분 집행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음에도 세항 간 전용 시 불필요한 이·전용 절차를 거치는 등에 따른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 단일세항으로의 통합이 오히려 빈번한 전용 절차로 인한 회계처리의 불투명을 없애고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아울러, 지적하신 각 심의관별로 세항을 나누어 편성하는 문제는 현재 각 심의관이 계선라인이 아닌 관계로 현재 진행 중인 인사기능이 일원화될 경우 각 국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기본경비에 편성된 사업성 경비를 해당 기본사업비에 편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에는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기관운영 단일세항으로 통합하면서 인건비, 기본경비, 사업성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은 세세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저희 위원회처럼 예산규모가 작고 대부분의 예산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인 기관의 경우 기본경비와 사업성기본사업비 간의 구분이 명확치 않음에 따라 세세항 간 불필요한 예산전용에 따른 행정낭비를 없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 기본사업비의 경우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으로 각 부처에 배정을 하고 각 부처는 부처의 상황에 맞게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것에 따른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용역비가 다른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바 용역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저희 위원회는 용역비 산정에 있어 민간 연구소나 타 정부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사업의 금액도 참고하는 등 객관적인 시장가격 수준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용역건당 평균 단가가 높은 것은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을 요하는 몇 개 과제의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이상으로 특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용역을 제외할 경우 평균 용역비는 훨씬 낮아지며,
 - 또한, 실제 집행단계에서 매년 예상치 못한 과제들이 추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평균 용역비는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내년이 출범 6년째가 되는 해로,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함께, 적정 연구용역비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2004년도 예산이 2003년보다 3.8%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정부에서 1차 확정된 2004년도 저희 중앙인사위원회 예산(안)은 총 94억 700만 원으로 2003년도 예산 78억 1000만 원 보다 20.5% 증액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 내역은
 - 현재 입주해 있는 청사의 임차료가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도 있으나
 - 무엇보다 올해 4월 직제개정으로 인사정보심 의관, 인재조사과, 기획공보과 등 1심의회관 2개 과가 신설되고, 정원도 83명에서 105명으로 22명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8억 5300만 원)와 관서운영경비(7100만 원)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2003년 1인당 경비를 산출하여 비교해 볼때 실질적으로는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인당 기준 예산액 증감 비교>

(단위 : 백만 원)

구 분	직제(정원)	예산액	1인당 예산
03년	2심의관 6과(83명)	7,810	94
04예산(안)	"	9,407	89

(金鶴松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매년 관서운영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내년 예산에 올해 대비 3.8% 증액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그동안 관서운영비의 전용과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출범 이후 업무량 폭증에 따라 직제개정(2001. 5, 2003. 4)이 몇 차례 이루어지면서 이에 필요한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전용이 있었고 정부 방침에 따른 자체 절감 노력 등에 따라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내년도 관서운영비는 19억 6300만 원으로 2003년 18억 9200만 원보다 71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 현재 입주해 있는 청사의 임차료가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 올해 4월 직제개정으로 인재정보심의관, 인재조사과 등 1심의관 2개 과가 신설되고, 정원도 83명에서 105명으로 22명이 늘어남에 따라 관서운영경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 첫째,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활용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완 및 시스템 관계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기존 수작업 위주의 인사업무 처리방식에 Digital 방식의 전자인사시스템(PPSS)이 도입되면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PPSS가 도입되고 그 유용성이 입증됨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은 농림부, 농진청, 여성부, 특허청 등의 부처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모든 부처에 PPSS의 활용도를 크게 높여 나가기 위하여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신설

하여 PPSS 활용방법에 대한 상시 교육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 1~3급 인사심사, 인사감사 등의 업무를 PPSS를 통해 수행하고, 국무회의 시 PPSS 시연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 기관장들의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작업 방안 강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2001년 농림부 등 4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의 시범적용을 마친 이후로도 시스템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유지보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 현재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은 S/R(Service/Request)시스템과 전화를 이용하여 각 부처의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으며,
- 또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방식에 있어서도 각 부처의 시스템이 중앙의 통합서버로부터 업그레이드 내용을 자동으로 다운받아 패치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유지보수 인력을 최소화하고 최신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에 대한 시스템 확산이 완료되는 내년에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의 품질개선 및 요구사항의 적극적 반영 등을 통해 PPSS의 활용도를 제고시킬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해킹 및 바이러스 대응체계 구축, 행정정보의 불법유출, 훼손·변조 등 위협에 대비한 장치 마련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구축함에 있어서는 네트워크-서버단계, PC-사용자단계 각각에서 3중 4중의 체계적인 보안책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먼저 네트워크-서버단계에서는,
 - 모든 정보가 정부전산정보관리소에서 운영하는 정부고속망의 방화벽 내부에서 유통되는 것은 물론이고
 - 중앙서버와 각 기관별 서버에도 별도의 방화벽과 침입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다음으로 PC-사용자단계에서는,
 - 사용자의 권한에 따라 접근 가능한 정보에

엄격한 구분을 두는 한편, 접속·열람내역을 기록하고

- 사용자 비밀번호의 주기적인 변경을 의무화하며
- 인가되지 않은 접근시도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접근이 차단되고 담당자에게 통보되며
- 접근 권한이 없는 내부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인사·급여담당자의 PC에 지문인식마우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일체의 장비와 프로그램은, 국가정보원이 승인한 것만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이 국가경제 사정상 무산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고 공무원 보수현실화계획이 또다시 무산된다면, 공무원 보수현실화는 요원하며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에 불신감을 갖고 사기저하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향적인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지적하셨습니다.

- 공무원 처우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공무원 보수 인상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의 불신과 사기저하가 일부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처우개선 정부안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지만, 공무원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앙인사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많은 용역비가 소요되나 설립 6년째가 되는 2004년도에는 연구용역비 예산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우선 초창기에 발주되었던 대부분의 연구용역들은 해당 시점에서 필요한 각종 개혁정책의 입안에 직접 활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 시점은 그간 용역결과를 실제 활용하는 시기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나, 정부 인사개혁 과제는 매년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은 위원회 설립 6년째가 되는 해인 만큼,

-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함께,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매년 유사·중복 과제가 발주되고 있는 바 이는 용역예산이 연례적이고 기계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은 당해 연도 인사개혁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자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 교수 및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정책 자문회의 등을 통해 연구용역 과제의 타당성과 필요성, 과제의 중복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있어 중복되거나 불요불급한 과제가 발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과제의 제목들을 볼 때 서로 유사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연고자 하는 연구결과 또는 정보 등의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정책연구용역사업 용역비가 다른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바 용역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용역비 산정에 있어 민간연구소나 타 정부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사업의 금액도 참고하는 등 객관적인 시장가격 수준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역건당 평균 단가가 높은 것은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을 요하는 몇 개 과제의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이상으로 특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용역을 제외할 경우 평균 용역비는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획예산처, 여성부 외의 타 부처의 경우 평균용역비가 4,000만 원대인 사례도 다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더욱 합리적인 용역예산 규모 산정을 위해 위원회 출범 6년째가 되는 내년엔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적

인 평가와 함께, 적정 연구용역비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연구결과의 실제 정책수립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작업과 함께 그 결과를 다음번 과제선정 시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객관적인 환류시스템 마련을 위해,

- 위원회 내 간부회의, 그리고 교수, 민간 연구소 연구위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선정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가 각종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집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관서운영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금년 8월 말 현재 관서운영비 집행률이 당초 예산액 대비 58.5%에 머물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만, 10월 말 현재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률은 72%이며, 타비목으로 전용한 금액을 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1%입니다.

<2003년 관서운영비 집행내역(03. 10월 말 현재)>

(단위 : 백만 원)

관서운영비 예산	지출액	예산편성액대비 집행률	타비목 전용액	남은 관서운영비 (예산현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1,963	1,403	72%	△138	1,741	80.6%

* 노후화된 PC교체를 위해 관서운영비 1억 38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

둘째, 매년 관서운영비 집행실적이 저조한데도 내년에 3.8% 증가하였는바, 전년도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내년도 관서운영비는 19억 6300만 원으로 2003년 18억 9200만 원보다 3.8% 증가하였습니다만

-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 현재 입주해 있는 청사의 임차료가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 올해 4월 직제개정으로 인사정보심의관, 인재조사과 등 1심의관 2개 과가 신설되고, 정원도 83명에서 105명으로 22명이 늘어남에 따라 관서운영경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제개정분을 감안할 경우 내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하셨습니다

첫째, 공무원보수현실화5개년계획에 따른 민간 임금 접근율이 작년에는 96.8%, 금년 말에는 97.3%로 예상되는데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말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의 민간 임금 접근율은 대략 97.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이 3%로 확정됨으로써 민간임금과의 격차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시면서, 민간 임금 접근율의 하락전망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이 3%로 확정되는 경우, 공무원 보수의 민간 임금 접근율은 95%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셋째, 내년도 목표인 민간 중견기업의 10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이 최소한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보수 현실화계획은 올해까지 당초의 목표치에 근접

하는 수준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목표연도인 내년도에 10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7% 수준의 공무원 보수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년 민간 임금 상승률을 5% 정도로 가정)

넷째, 국가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공무원보수 현실화계획이 무산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초래와 공무원들의 심각한 사기저하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안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공무원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반부처와 중앙인사위원회가 각각 개방형직위 선발계획을 공고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 개방형직위제도에 대한 공직 내외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 부문의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의 홍보를 통한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고,

- 이러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여러 위원님과 시민단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전갑길(민주당) 위원 등 02년 정기국회 시

홍보활동의 강화를 주문

* 행정개혁시민연합의 연구용역보고서 (2001년) 등

○이에 따라 저희 위원회는,

- 관련 규정에 따라 작년에 이어 금년도 상·하반기에 총원이 예정된 정부 전체 개방형직위 모집계획을 공고하는 등 정부 차원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근거 : 개방형직위규정 제4조제2항('02.4.18 개정)

-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 전체의 개방형직위 시험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함

* 03. 2월(22개 부처 40개 직위), 03. 8월(13개 부처 24개 직위)

○이렇게 중앙인사위원회가 종합안내센터로서 정부 전체의 개방형직위 모집계획을 공고하는 것은,

- 각 부처에서만 개별적인 직위에 대하여 부정기적이고 산발적으로 공고할 경우 민간 우수인력들이 종종 응시 기회를 놓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 무엇보다도 응모자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모집이 예상되는 전체 직위의 선발일정에 대하여 안내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 이로 인하여 과거 15.9%에 불과하던 외부임용률이 28.3% 수준으로 높아지는 등 우수 외부인력의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는,

- 더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개방형직위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홍보매체 현황

1차(02년 8월)	2차(03년 2월)	3차(03년 8월)
- 관보 - CSC홈페이지, - 일간신문	계속	계속
-	- 케이블TV(YTN·KTV) -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 - 국정홍보처 옥외전광판 - 전문지(인사관리) - 정부정기간행물(인사행정) 등 추가	계속

1차(02년 8월)	2차(03년 2월)	3차(03년 8월)
-	-	- 지하철 객차광고 - 브라우저 및 이메일(국가인재DB수록자) 등 추가

(안대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무원 보수 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하셨습니다

첫째, 내년도가 공무원보수현실화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내년도는 2000년부터 추진해온 공무원보수현실화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2004년도의 보수 인상율은 최소 6.6%는 되었어야 하는데 정부안은 3% 인상에 그쳤다고 지적하시면서 공무원보수현실화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보수현실화계획을 목표연도인 내년도에 100%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략 7% 수준의 공무원 보수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내년 민간 임금 상승률을 5% 정도로 가정).

○정부안대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로 확정되는 경우, 공무원 보수와 민간 임금 간의 격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정부는 내년도 민간 임금 인상률, 경제여건 등을 보아가면서 공무원보수현실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공무원보수인상이 후반기에 흐지부지되는 과정이 반복되어 왔고,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에 불신감을 갖고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공무원 보수 현실화 문제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보다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국가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처우 개선 정부안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수준으

로 결정되었습니다만, 공무원 처우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인사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많은 용역비가 소요되나 설립 6년째가 되는 2004년도에도 예년과 다름없는 용역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정부인사개혁을 위한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간 연구용역을 통해 각종 개혁정책을 입안·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개혁정책은 매년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며, 특히 중앙 인사기능이 저희 위원회로 통합될 경우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04년도에도 예년 수준의 용역 예산이 편성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기존에 발주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시기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초창기에 발주되었던 대부분의 연구용역들은 해당 시점에서 필요한 각종 개혁정책의 입안에 직접 활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시점은 그간 용역 결과를 실제 활용하는 시기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나, 정부인사개혁 과제는 매년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년은 위원회 설립 6년째가 되는 해인 만큼,

- 지난 5년간 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함께, 연구용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매년 유사·중복 과제가 발주되고 있는 바 이는 용역예산이 연례적이고 기계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연구과제의 제목들을 볼 때 서로 유사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얻고자 하는 연구결과 또는 정보 등의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연구결과의 실제 정책수립에의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 작업과 함께 그 결과를 다음번 과제선정 시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객관적인 환류 시스템 마련을 위해,

-위원회 내 간부회의, 그리고 교수, 민간 연구소 연구위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선정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가 각종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집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경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용역비가 다른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용역비 산정에 있어 민간 연구소나 타 정부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사업의 금액도 참고하는 등 객관적인 시장가격 수준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용역건당 평균 단가가 높은 것은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을 요하는 몇 개 과제의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이상으로 특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용역을 제외할 경우 평균 용역비는 훨씬 낮아지며,

-또한, 실제 집행단계에서 매년 예상치 못한 과제들이 추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평균용역비는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PPSS에 수록된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되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서는 모든 정보가 정부 전용망인 정부고속망의 방화벽 내부(Intranet)에서만 유통되는 운영체제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킹 등의 외부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일체의 장비와 프로그램은 국가정보원에서 승인한 것만 적용하였으며

-통합서버와 각 기관별 서버에도 별도의 방화벽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시스템 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접근자를 모니터링하며,

-담당자 이외의 내부자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문인식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보호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보 DB의 정부부처 간 활용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이 구축되면 각 부처에서는 부처의 독립서버를 통해 해당부처의 인사자료를 관리하게 되며 인사통계 자료는 본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중앙인사위원회 통합서버에 수집되어 인사행정에 필수적인 통계자료를 생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의 데이터베이스는 각 부처 개별서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사·급여 실무자 뿐만아니라 일반공무원에게까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공무원 센서스도 PPSS를 통해 최신의 자료가 실시간 제공되므로 5년마다 별도로 실시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부처에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분석 자료를 PPSS를 통해 제공받게 되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인사행정을 가능케 함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채용정보 및 각종 공무원 관련 각종 통계 자료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尹鐵相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용역비가 다른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저희 위원회는 용역비 산정에 있어 민간연구소나 타 정부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사업의 금액도 참고하는 등 객관적인 시장가격 수준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용역건당 평균 단가가 높은 것은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을 요하는 몇 개 과제의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이상으로 특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용역을 제외할 경우 평균 용역비는 훨씬 낮아지며,
 - 또한, 실제 집행단계에서 매년 예상치 못한 과제들이 추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평균용역비는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인사기능 통합 및 개혁주체세력 구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기능이 통합되면 인사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진 합의제 기관으로 인사위원은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인사기능이 중앙인사위로 통합되면 정부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인사개혁의 추진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둘째, 개혁주체세력 구축과의 관계 설정과 관련한 중앙인사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으며, 개혁주체세력 구축과는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인재 DB의 활용도가 저조한 이유, 국가인재 DB의 질적 수준 개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첫째, 국가인재 DB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국가인재 DB의 활용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구축 초기의 홍보부족이라고 판단되어 금년부터 저희 위원회에서는 홍보용 책자를 발간·배포하고, 각종 자문위원 또는 시험위원 위촉 시

- 국가인재 DB를 활용하도록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는 등 꾸준히 노력한 결과
 - 올해부터는 월평균 8건으로 그 활용 실적이 100%나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는 보다 많은 인물정보를 수록하고 정보의 질적 수준도 제고함으로써 국가인재 DB가 능력 중심의 적재적소 인사에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국가인재 DB의 질적 수준 개선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저희 위원회는 국가인재 DB에 수록된 인물정보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 지난 4월 인재조사과를 신설하여 전담인력을 14명으로 증원하면서, 대상자의 저서, 논문, 기고문, 인터뷰 등의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함으로써 대상자의 전문성, 관리능력, 정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 인재 DB의 질적 수준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간 헤드헌터 업체의 Know-how를 습득하기 위하여 10년 경력의 헤드헌터를 특별채용하여 민간의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인재 D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가인재 DB의 활용도를 높여 가기 위하여 국내외 우수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수록된 인물정보의 질을 더욱 높여 나가는 한편,
- 또한, 인재 DB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적격자 검색과 사용의 편의성, 보안성 등을 강화하고, 행정기관, 공공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2004년도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 관련 예산에 시스템 교육이나 보안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 2004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에는 시스템 교육과 보안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PPSS 3단계 확산사

업 사업수행자가 04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 예산으로 사용자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 완료할 예정이며, 동영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PPSS 사용자가 시간, 공간 등에 관계없이 PPSS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보안에 있어서도 현재 기술력으로 가능한 모든 보안기술을 시스템에 반영하였으므로, 당분간 보안장비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PPSS에 적용한 보안장비를 말씀드리면,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로그세이버, 지문인식마우스, 서버보안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인사자료의 보안을 위하여 정부고속망 내에서의 시스템 운영, 행정EDI(데이터 송수신 암호화)적용, 계정 및 패스워드의 철저한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스템 교육과 보안수준을 고려할 때, 내년도까지는 이와 관련한 비용이 필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교육환경 변화 및 보안기술 진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국가인재 DB에 수록된 여성인력 숫자, 국가인재 DB와 여성부에서 검토 중인 여성인력 DB와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수록된 인원 중 여성인력은 약 3600명으로 전체 수록 인원 7만 2000명의 5% 정도임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성 전문인력의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여성부와 여성개발원으로부터 약 300여 명의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국가인재 DB에 수록하였으며,

○또한,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제청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문을 지난 7월 말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여성 인력의 발굴 및 국가적 활용을 위해 여성부 및 여성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계속 유지토록 하겠으며,

-여성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여성인력 DB와 국가인재 DB를 연계 또는 공동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희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용역 발주가 8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 연구기간이 짧아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이런 과제들이 부실화되지 않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실질적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가급적 상반기에 발주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모든 과제를 상반기에 발주하는 것이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의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사정책자문회의를 통해 과제선정 및 연구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확인

-최상의 용역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평가

-예상치 못한 정책연구과제 수요의 발생 등

○이러한 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반기에 발주되는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수차례에 걸친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연구용역 수행자·관계 부처 공무원 간 밀도 있고 충분한 논의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가 각종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인사위원회 연구용역비는 타부처 및 일반 사회과학 분야에 비해 매우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용역비 산정에 있어 민간연구소나 타 정부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사업의 금액도 참고하는 등 객관적인 시장가격 수준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역건당 평균 단가가 높은 것은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을 요하는 몇 개 과제의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이상으로 특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용역을 제외할 경우 평균 용역비는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기획예산처, 여성부 외의 타 부처의 경우

평균용역비가 4000만 원대인 사례도 다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더욱 합리적인 용역예산 규모 산정을 위해 위원회 출범 6년째가 되는 내년엔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함께, 적정 연구용역비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奎甲吉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대한 위원회의 견해 및 향후 정부의 효율적 기구개편에 대하여 위원회가 시정·권고할 의지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 정부조직의 개편 업무는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이 아니며 행정자치부의 소관업무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SS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기존 수작업 위주의 인사업무 처리방식에 Digital 방식의 전자인사시스템(PPSS)이 도입되면서 도입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PPSS가 도입되고 그 유용성이 입증됨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은 농림부, 농진청, 여성부, 특허청 등의 부처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모든 부처에 PPSS의 활용도를 크게 높여 나가기 위하여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신설하여 PPSS 활용방법에 대한 상시교육 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1~3급 인사심사, 인사감사 등의 업무를 PPSS를 통해 수행하고, 국무회의 시 PPSS 시연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 기관장들의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 중앙인사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용역비가 다른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바 용역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저희 위원회는 용역비 산정에 있어 민간연구소나 타 정부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사업의 금액도 참고하는 등 객관적인 시장가격 수준에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용역건당 평균 단가가 높은 것은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을 요하는 몇 개 과제의 연구용역비가 1억 원 이상으로 특히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용역을 제외할 경우 평균 용역비는 훨씬 낮아지며,
- 또한, 실제 집행단계에서 매년 예상치 못한 과제들이 추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의 평균 용역비는 크게 의미있는 것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내년이 출범 6년째가 되는 해로, 지난 5년간 추진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함께, 적정 연구용역비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연구결과의 실제 정책수립에의 반영여부에 대한 평가작업과 함께 그 결과를 다음번 과제 선정 시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 저희 위원회는 객관적인 환류시스템 마련을 위해,
- 위원회 내 간부회의, 그리고 교수, 민간 연구소 연구위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정책자문회의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선정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가 각종 정책수립에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집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범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국가인재 DB의 보안대책과 여성인력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국가인재 DB의 보안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국가인재 DB를 구축·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유출되지 않도록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운용규정(대통령 훈령 제 89호, '00. 3. 24)을 제정하여 목적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 외부에 인물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활용목적과 내용을 명기한 공문서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재 DB의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메인서버를 행정망 내부(Intranet)에서만 운용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Internet 기반의 NEIS 등과 근본적 차이점
-필요한 최소인원에게만 접근(access) 권한을 부여하고, 사용시간과 내역을 자동기록하는 등 안전을 기하고 있으며, 담당직원에 대하여도 인사이동 시 ID와 Password의 교체는 물론 보안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인력 확보 방안과 여성부에서 검토 중인 여성인력 DB와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인재 DB에 수록되어 있는 여성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여성 전문인력의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여성부와 여성개발원으로부터 약 300여명의 여성 전문인력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국가인재 DB에 수록하였으며

○또한,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임명·위촉·제청 시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공문을 지난 7월 말에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여성 인력의 발굴 및 국가적 활용을 위해 여성부 및 여성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여성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여성인력 DB와 국가인재 DB를 연계 또는 공동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의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매년 관서운영비의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내년 예산에 올해 대비 3.8% 증액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관서운영비의 전용과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출범이후 업무량 폭증에 따라 직제개정(2001. 5, 2003. 4)이 몇차례 이루어지면서 이에 필요한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예산 전용이 있었고 정부 방침에 따른 자체 절감 노력 등에 따라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년도 관서운영비는 19억 6300만 원으로 2003년 18억 9200만 원보다 71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입주해 있는 청사의 임차료가 물가인상분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올해 4월 직제개정으로 인재정보심의관, 인재조사과 등 1심의관 2개 과가 신설되고, 정원도 83명에서 105명으로 22명이 늘어남에 따라 관서운영경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인사기능 통합과 관련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 내에서 인사기능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와 이견이 없었는지와 행자부 인사국 직원과의 워크숍 결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인사기능 일원화가 정부 인적자본 관리체제를 효율화하고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을 인식하는 한편

-정부 인사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개혁 추진에 한계가 있고, 관련 업무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별도 수행함에 따른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 소지 등의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인사기능 일원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행정자치부 인사국 직원과의 워크숍 역시 이러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향후 인사기능이 일원화될 경우 새로운 중앙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정부 인사기능 일원화에 대비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의 인적자본 관리체제는 인사 관장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어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고

-각 부처의 업무수요와 특성에 맞도록 인력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채용, 승진 등 인사집행권은 각 부처에 과감히 위임하고

-중앙 인사관장 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인사에 관한 전략적 정책의 개발, 핵심 고위공무원의 관리, 부처 인사운영에 대한 지원 및 사후감사·평가 등에 집중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PPSS 구축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PPSS 제3차 사업은 원래 금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 정부에서 작년까지만 사업을 관리했던 전자정부특위의 활동이 끝나고 참여정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새로운 전자정부로드맵이 수립·확정되는 과정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예산집행이 다소 지연됨으로써 본 사업의 발주도 예정보다 몇 개월 지연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PPSS 구축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보화마인드가 부족한 일선 공무원들의 사용 의지를 제고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PPSS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인사 담당자들이 일부 소극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각 부처에 총무과장, 인사계장, 인사담당자, 급여담당자, 전산담당으로 구성된 PPSS 추진단이 구성되고 있어서 중앙인사위 추진단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인사 담당자, 급여 담당자, 일반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이 작성 배포되었고 각 부처 사용자를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시간·공간을 초월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연말부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3급 이상 인사심사, 다면평가 등을 PPSS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中小企業特別委員長 韓竣皓
(김덕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이 계획과 달리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편성 시 용역과제의 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용역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중소기업의 주변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한 용역사업이 실제 집행되는 시기에 바뀌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는 2만 불 달성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지역균형발전, 인력문제 해결 및 신용지원 강화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실태 파악 및 육성방향연구
- * 2만 불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선진형 생산구조 구축방안
-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모형 구축
-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
- * 중소기업의 기술평가와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 *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위험 DB 구축방안

○2004년도 연구용역 과제는 중소기업의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지원방안 등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②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중소기업 성장지원 방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지원을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연구

③비즈니스 서비스 분야(BS)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역량을 핵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마케팅, 인적자원 개발 등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중소기업 간 Network 형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도모

④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 병행 실시가 중소기업

기업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산업연수제와 병행 실시됨에 따라 이러한 병행 실시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여 향후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에 반영 추진

⑤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책 현황 실태조사

주5일근무제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스스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

○저희 위원회는 내년도 연구용역 과제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청소년비즈쿨 사업을 중기청으로 이관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비즈쿨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생산인력의 주공급원인 실업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과 경영마인드를 고취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비즈쿨 시행 초기에는 교육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협의할 일이 많았고 인식제고를 통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일정기간 중기특위에서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동 사업이 기반구축 단계를 벗어나 다양한 집행 업무 추진이 필요하게 되어 2003년 5월 말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정책집행형 사업은 실무부처 사업으로 이관하고 위원회에서는 정책의 연구 평가 분석 등과 관련된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는 각 부처 중소기업 시책을 조정하고 정책의 연구 평가 분석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방향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설립 이래 중기특위(36회 개최, 155건 심의)를 통해 현장애로의 정책화와 제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정책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교수·연구원의 벤처기업 임원 겸직 및 실험실 창업 허용, 벤처시책 추진 과정의 일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01), 정책자금 지원을 용자 위주에서 직접금융을 활용토록 중소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제도 도입 등 관련부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심의·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사·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 중소기업 발전 비전 2010 제시
- *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화 방안 연구 (21개 부처, 201개 법률)
- *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중장기 운용방안 연구 (12개 부처, 5조 5000억 원)

○또한 중소기업에게 필수적이지만 부처 간 협조 부족으로 지연된 각종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연쇄부도 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해 어음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구매자금용 제도를 도입·활성화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97개 기관, 44조 8000억 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실효성 평가 (15개 기관, 5649억 원)

*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 절차 간소화(4개 부처, 37개 자금) 등

○내년에도 지식 정보화, 국제화, 지방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정책 과제를 적극 개발하겠습니다.

○특히 각 부처의 중소기업 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간의 우선순위 설정, 중복 조정 및 연계방안 검토 등 예산사전조정제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점검하여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비 등 1억 원은 실무부처 사업으로 이관하고, 위원회에서는 정책의 연구 평가 분석 등과 관련

된 사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중소기업인 대회 예산사업은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5000만 원), 지역 중소·벤처기업 정책 보고회 및 토론회(4100만 원), 공공구매촉진대회(900만 원)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별개의 사업입니다.
-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와 지역 중소·벤처기업 정책 보고회의 경우 98년 4월, 우리 위원회 설립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 전국을 순회하며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발굴·해소하고, 중소기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여 이를 정책화하며,
 -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여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널리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 두가지 사업들은 중소기업특별위원회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설립목적 중 “중소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중소기업 육성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중소기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에 부합되는 사업입니다.
- 또한 공공구매촉진대회는 2001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에게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우수제품을 개발, 공급하도록 하여 수입대체와 공공기관의 예산절감 효과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동 행사는 정부 각 부처 등 공공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행사이기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우리 위원회 이외에 다른 실무부처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 따라서 중소기업인 대회 예산사업의 3가지 사업 모두는 우리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며, 사업성격상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鶴松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에 대하여 중기청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지적하시고,

법률적 근거 마련 및 평가 대상사업의 합리적인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 현재(03. 6~11) 중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중소기업의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 용역내용에 포함된 중소기업 정책평가는 주요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분야별 개괄적인 평가이며
 -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기청이 상시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시책 평가는 중기청의 시책에 한정된 자체 평가입니다
- 반면 중기특위가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시책 평가는
 - 정부 전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조정이라는 점에서 중기청의 평가 시스템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중소기업예산사전조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 다만 중기특위는 여타 정부 부처처럼 정부조직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고, 세부적인 기능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 예산사전조정제와 같은 개별적인 기능을 법률(정부조직법)에 규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편성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전조정 결과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 이를 위해 유사한 평가·조정 사례 등을 참고하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또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평가 및 조정이 될 수 있도록
 - 부처 간, 사업 간 유사·중복의 정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도 및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이 계획과 달리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편성 시 용역과제의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용역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중소기업의 주변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한 용역사업이 실제 집행되는 시기에 바뀌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는 2만 불 달성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지역 균형발전, 인력 문제 해결 및 신용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실태 파악 및 육성방향 연구
- * 2만 불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선진형 생산구조 구축 방안
-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모형 구축
-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 방안
-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평가와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 *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 위험 DB 구축 방안

○2004년도 연구용역 과제는 중소기업의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②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방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연구

③비즈니스 서비스 분야(BS)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역량을 핵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마케팅, 인적자원개발 등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중소기업 간 Network 형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④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 병행 실시가 중소

기업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산업연수제와 병행 실시됨에 따라 이러한 병행 실시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여 향후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개선에 반영 추진

⑤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책 현황 실태조사

주5일근무제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스스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

○끝으로 2004년도 저희 위원회의 연구용역비중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부문의 연구용역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시책평가예산을 포함할 경우 03년도 보다 39.1% 증가한 10억 68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연구 수요를 보다 더 폭넓게 그리고 신중하게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내년도 연구용역 과제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이 중기청 사업과 중복 문제가 있고, 평가 대상사업 전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어려우므로 동 사업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03. 6~11) 중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중소기업의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 용역 내용에 포함된 중소기업 정책평가는 주요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분야별 개괄적인 평가이며
-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기청이 상시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시책 평가는 중기청의 시책에 한정된 자체 평가입니다

○반면 중기특위가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시책 평가는

- 정부 전체의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조정이라는 점에서 중기청의 평가 시스템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합

- 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우리 특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전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평가 및 조정이 될 수 있도록
 - 부처 간, 사업 간 유사 중복의 정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도 및 규모, 사업의 특성

-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다만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볼때
 - 중소기업시책평가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04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및 R&D사업 평가·조정 비교>

구 분	중소기업지원사업	R&D사업
○평가·조정기간	3~6월(4개월)	좌 동
○대상사업 규모 (03 당초예산 기준)	8조 3049억 원	4조 4841억 원
○소요예산(04예산안)	<16개 부처, 195개 사업> 7억 원	<18개 부처, 155개 사업> 15억 원

(안대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가 대폭 감소한 이 유를 물으시고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실업인력 활용방안’을 연구용역 과제로 검토할 필요성과 정책연구사업과 평가사업을 단일화하여 추진할 경우 정책연구사업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먼저 저희 위원회의 연구용역비 중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부문의 연구용역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시책평가 예산을 포함할 경우 03년도 보다 39.1% 증가한 10억 68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정책연구 용역과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도에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연구용역 과제로 추진하였고 2002년도에는 청소년비즈쿨사업 관련 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청년실업인력 활용방안’도 중기청 등 관계부처의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고려하여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 그리고 정책 연구용역과 시책평가는 사업성격 및 추진방법이 유사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만, 예산편성 목적과 국회의 심의

내역에 맞게 추진하여 중소기업정책연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재의 중소기업시책평가단(14명)으로는 195개나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전반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우므로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 사업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견해를 같이합니다
- 우리 특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전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평가 및 조정이 될 수 있도록
 - 부처 간, 사업 간 유사·중복의 정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도 및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인력 운영방식에 있어서 2004년도 시책평가 시에는 현재 운영 중인 시책평가단을 평가·사전조정위원회와 10여개 소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분야별로 효율적인 검토를 가능케 하고
 -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하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尹鐵相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는 연구용역이 계획과 달리 집행되고 있고 예산도 과다 편성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편성 시 용역과제의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용역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중소기업의 주변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한 용역사업이 실제 집행되는 시기에 바뀌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는 2만 불 달성을 위한 성장 잠재력 확충, 지역 균형발전, 인력 문제 해결 및 신용 지원 강화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실태 파악 및 육성방향 연구
- * 2만 불 달성을 위한 중소제조업의 선진형 생산구조 구축 방안
-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모형 구축
- * 중소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
-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평가와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 *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위험 DB 구축방안

○2004년도 연구용역 과제는 중소기업의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②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방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연구

③비즈니스 서비스 분야(BS)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역량을 핵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마케팅, 인적자원 개발 등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중소기업 간 Network 형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도모

④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 병행 실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산업연수제와 병행 실시됨에 따라 이러한 병행 실시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여 향후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에 반영 추진

⑤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책 현황 실태조사

주5일근무제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스스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

○저희 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 연구용역의 건당 예산에 차이가 있는 것은 수행 과제의 중요도, 요구하는 용역 결과의 수준 등이 상이하기 때문임을 말씀드리며 내년도 연구용역 과제를 예산편성 목적과 국회에서 심의받은 내역에 맞게 차질 없이 수행하여 중소기업에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는 중기특위 예산이 중기특위의 중요성에 비해 적게 편성되었고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폐지를 특위가 제안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할 기술인력 양성에 중기특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의 2004년도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은 03년도에 저희 위원회가 추진하던 청소년비즈쿨사업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함에 따른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시책평가 예산이 증액되어 청소년비즈쿨사업(10억 원)을 제외할 경우 15억 9000만 원에서 18억 5000만 원으로 약 3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와 지정계열화업종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판로 등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약

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45개)은 향후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지정계열화업종(24개)은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균형개발과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희 위원회도 갖고 금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도 지방 중소기업 육성을 보고드렸고 상반기에 전국 13개 지역에서 실시한 ‘중소기업 정책 보고 및 토론회’에서도 지역 중소기업 현안 및 발전방안을 해당지역 입장에서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중소기업 정책 보고 및 토론회’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의 발전 방안과 애로 및 정책건의사항을 수렴·제도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방안’등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승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가 대폭 감소한 이유를 물으시고 용역과제 선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소기업 정책연구관련 예산을 좀더 확보하고 용역과제 선정도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의 연구용역비 중 제도개선 및 정책개발 부문의 연구용역 예산은 줄었습니다만 시책평가 예산을 포함할 경우 03년도 보다 39.1% 증가한 10억 68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책 연구용역 과제도 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근무제는 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고, 고용허가제도 내년 8월에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실태를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사할 계획이고

-2만 불 달성을 위한 중소제조업의 선진형 생산구조 구축방안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 정책연구 수요를 보다 더 폭넓게 그리고 신중하게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全甲吉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시책평가 및 예산 사전조정’ 관련 연구용역이 금년 6월부터 중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장기 발전 전략과 비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유사하다고 지적하시며 양 사업 간의 차이점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중기특위가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시책평가 및 예산사전조정사업은

-매년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및 분야별·사업별 지원 우선순위 등을 기획예산처에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현재(03. 6~11) 중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중소기업의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평가, 중소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용역내용에 포함된 중소기업 정책 평가는 주요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분야별·개괄적인 평가이고

-또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기청이 상시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시책 평가는 중기청의 시책에 한정된 자체평가라는 점에서 양 사업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연구용역이 계획과 달리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기특위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연구용역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용역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 중소기업의 주변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한 용역사업이 실제 집행되는 시기에 바뀌게 된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는 2만 불 달성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지역 균형발전, 인력 문제 해결 및 신용지원 강화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실태 파악 및 육성방향 연구
- * 2만 불 달성을 위한 중소기업의 선진형 생산구조 구축방안
-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균형발전 모형 구축
-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
-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평가와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 *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한 신용위험 DB 구축방안

○2004년도 연구용역 과제는 중소기업의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지원방안 등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①중소벤처기업의 효율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안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②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방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 연구

③비즈니스 서비스 분야(BS) 중소기업의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의 역량을 핵심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컨설팅, 마케팅, 인적자원 개발 등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중소기업 간 Network 형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④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 병행 실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산업연수제와 병행 실시됨에 따라 이러한 병행 실시가 중소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여 향후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개선에 반영 추진

⑤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책 현황 실태조사

주5일근무제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스스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

○저희 위원회는 내년도 연구용역 과제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2년 9월부터 1년 동안 정책자금안내시스템의 이용자가 약 33만 5000명으로 이용실적이 매우 미흡(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 등 총 350여만 명 대비 10% 미만)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전략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정책자금안내시스템을 중소기업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시스템 개편 시마다 일간지에 보도하고, 정책자금안내시스템을 Daum 등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및 각 부처 홈페이지와도 연결하였으며,

-또한 상담사에 의한 상담기능 강화, 정책자금 동호회 코너 신설 등을 통한 이용자의 주변을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스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자금 동호회를 통한 토론회 개최, 상담사와의 상담내용 공개, 팸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정책자금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에 홍보 의뢰를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현재와 같이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서 중기청 예산 축소와 경영안정자금의 전액 삭감과 같은 금융지원의 대폭적인 감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중기특위가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중기청 예산이 03년 예산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은
 - 보증기관 출연(4800억 원 감액) 등 금융지원 예산이 대폭 축소된 데 기인하나
 - 이는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의 기본재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증공급 규모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금융지원을 제외한 주요사업비는 약 700억 원이 증가하여
 - 기술(10.5%), 정보화(5.5%), 수출(25.5%), 인력(237.7%)지원 분야의 예산은 증가하였습니다.
-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자금이나 구조개선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 경영안정자금의 전액 삭감과 같은 일시적인 전환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희 중기특위도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을 감안, 금융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서는 정보, 기술, 과학의 시대에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이공계 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특위의 견해와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정보, 기술, 과학의 시대에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위해 이공계 출신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적극 동의합니다.
- 정부에서도 국가경쟁력 향상과 과학기술적 정책수요 부응 등을 위해 제13차 국가과학기술위원회(03. 8. 20)에서 우수 이공계 출신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확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마인드를 갖춘 이공계 출신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 우리 위원회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등 각종

- 위원회에 이공계 출신자들의 참여를 증대시킬 계획이며
 - 위원회 파견근무 직원도 일정부분 이공계 출신자들로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하여 지식정보화시대, 과학기술시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우리 중소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범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서는 중기특위의 2004년 중점사업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극복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는 청년실업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 문제는 여전히 주5일근무제 도입과 3D업종 기피 현상 지속으로 향후에도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력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생산현장 직무 기피 요인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청년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체험 활동(중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도 그동안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기청, 노동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시책을 심의 조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청소년의 비즈니스 마인드 제고와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청소년비즈니스사업을 자체 개발·보급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극복이 내년도 정책의 중점과제라는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특히 금년에 제정된 고용허가제 관련 법률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

항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 또한 위원회내에 (가칭)중소기업인력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인력난 해소와 청년실업 극복에 최선을 다해 나가코자 합니다.

(정의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서는 16개 부처, 195개나 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시며, 동 사업이 중기청 사업과 중복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 외부 전문가 등으로 평가·사전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하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유용한 평가 및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유사·중복의 정도,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현재(03. 6~11) 중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용역은 중소기업의 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 용역 내용에 포함된 중소기업 정책 평가는 주요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분야별·개괄적인 평가이며
 -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기청이 상시적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시책 평가는 중기청의 시책에 한정된 자체 평가입니다
- 반면 중기특위가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시책 평가는
 - 정부 전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조정이라는 점에서 중기청의 평가 시스템과는 구분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서는 중기청이 수립 중인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추진전략(안)을 산자부, 정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추진전략(안)’을 금년 내에 수립하여 산자부, 정통부 등

관계부처의 지원 사업 간 연계 강화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동 전략(안)은 정보화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현행 업무 효율화 단계에서 07년까지 지식정보화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 : (03)49.2점→(05)60점대→(07)70점대
 - 구체적으로 ①지원대상을 ‘저변확산’과 ‘선택 집중’으로 차별화 지원하고 ②지원내용을 ‘보호·육성’에서 ‘자율·경쟁’으로 전환하며 ③ 지원 체제 및 사후관리 체제를 수요자 위주로 변경하는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 세부 추진 과제로 정보화 혁신 클러스터 육성, 경영혁신형 정보화 지속 지원, 생산성향상형 정보화 발굴·확산, 자체 추진 역량 강화 및 인력양성, 사업추진 연계체제 및 사후관리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 현재 동 전략(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 관계 부처,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계속 산자부·정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기청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서는 청년실업 문제와 3D업종의 심각한 인력난 등 인력 문제의 괴리를 지적하시면서 중기특위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는 청년실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 문제는 여전하며 주5일근무제 도입과 3D업종 기피현상 지속으로 향후에도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인력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생산현장 직무 기피 요인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청년인력 유입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체험활동(중활)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도 그동안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

- 를 위해 중기청, 노동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 지원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 청소년의 비즈니스 마인드 제고와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청소년비즈니스사업을 자체 개발·보급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도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도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등 인력 문제의 괴리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 특히 금년에 제정된 고용허가제관련법률과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하며,
 -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 또한 위원회 내에 (가칭)중소기업인력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계획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이라는 인력 문제의 괴리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코자 합니다.

○企劃豫算處長官 朴奉欽
(김덕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정책점검사업이 지난 3년간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와 정책연구개발사업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은 사유 및 정책점검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저희 처의 정책점검사업(04예산안 : 2억 원)은 재정집행, 총사업비 관리, SOC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사업입니다.
 - 매년 상반기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애로사항을 보아 가면서 과제를 발굴하여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 대부분 하반기 발주로 인해 02년의 경우 일부 이월(5600만 원)이 발생한 바, 앞으로는 연구용역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구용역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이월 최소화 노력을 강화한 결과 이월 규모는 매년 감소되어 개선되어 가는 추세
 - 이월규모 : (01) 8900만 원 → (02) 5600만 원
 - 불용규모 대폭감소 : (01) 3000만 원 → (02) 100만 원
 - ※03년 예산의 경우 2억 원 중 1억 9990만 원을 계약 완료하여 집행 중이므로 이월 및 불용 없이 연내 집행 완료 가능.
- 또한, 정책점검사업은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집행점검을 위해 편성된 경비로서
 - 2000년 이후 매년 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왔으며, 집행점검·사후관리를 위한 예산규모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 중장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소요가 큰 주요정책 및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정책연구개발사업(4억 원)과는 차별화가 되도록 연구과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수행과제

정책점검사업(2억 원)	정책연구개발사업(4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도입 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성과평가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부대경비 정비방안 • 재정사업 사후평가 제도 도입방안 • 중앙정부예산 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외국의 재정집행 관리시스템 사례 연구 • SOC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방안 • 신산업 기술개발과 전통산업 지원방안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정책 방향 • 교육재정의 역할과 정책과제 • 과학기술분야의 재정운용 비전과 전략제시 • 문화재정 운용의 현안과제와 발전 방향 • 관광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 전략 등

※최근 3년간 정책점검사업 예산 집행현황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B)	불용액 (C)	이월률 (B/A,%)	불용률 (C/A,%)	예산대비 집행률 (%)
2000	200	-	200	124	65	11	32.5	5.7	62
2001	200	65	265	146	89	30	33.6	11.3	55.1
2002	200	89	289	232	56	1	19.4	0.3	80.3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예산·기금안 편성 이전에 심층분석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잠정적·예비적 성격의 검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과평가는 기획예산처 자체평가 방식과 외부 연구용역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평가는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기획예산처의 내부적인 절차로서

-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 과정에서 해당사업의 지원규모, 향후 투자방향 및 제도개선 등을 판단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의사결정 이전의 판단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외부 연구용역 결과는 일반자료와 마찬가지로 국회요구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위해서는 산하기관을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차별화된 평가지표 개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하기관의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유형별로 그룹화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처는 현재 산하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화에 따른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며,

<03년도 연구용역사업의 내용>

- 제목 : 정부산하기관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 산하기관 유형별 분류, 유형별 경영혁신 대상과제, 경영평가 방식, 평가 결과에 따

- 큰 인센티브 및 관련기관간 역할분담
- 용역기간 : 03. 11월초 ~ 04. 1월 말(약 3개월)
- 용역비 4980만 원, 용역기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 내년에는 금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공통의 평가지표 개발’ 등 본격적인 평가제도 시행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 04년도 예산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金鶴松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재정기획국을 재정기획실로 2배나 확대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국회 예산정책국의 기능과 재정기획실의 기능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였는지를 물으시고 앞으로 성실한 업무수행을 당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기획국을 재정기획실로 확대 개편한 것은

○02년 국정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재정기획 기능과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직제상 정원 : 재정기획국 33명 → 재정기획실 60명

○이는 기획예산처 전체 정원 범위 내에서 기능조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예산정책처법의 시행(03. 10. 18일)으로 기존의 예산정책국이 예산정책처로 확대 개편되어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기능>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국가재정 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전망
-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이렇게 되면 심층적인 분석, 상호보완을 통하여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위원님께서 당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기획예산처 조직개편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 국회예산정책처와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예산제도개선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기본사업비 성격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사업은 업무성격상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한정된 기본사업비 재원 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 주요사업으로 예산을 반영

□예산제도개선사업은 예산편성 절차 개선 및 예산과목 체제개편 등을 위한 실소요 경비로서

○기본사업비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최소한의 부족소요를 반영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예산제도개선사업 총 5억 8400만 원>

- 관서운영비 : 1700만 원(재정정책연찬회 인쇄비)
- 여비 : 120(주요국 예산제도 조사 여비)
- 업무비 : 102(민간전문가 업무협대비 등)
- 위탁사업비 : 300(국제기구 공동 프로젝트 수행)
- 자산취득비 : 45(제도연구에 필요한 고속복사기 구입 등)

04년 예산과목 구조를 개편하면서 부서별(실·국단위), 사업성격에 따라 세항을 통합함에 따라 소규모 기관인 경우 기관 전체 예산을 단일세항으로 편성하여 전용절차 없이

예산을 타용도로 집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일세항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적하셨습니다.

- 정부는 04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 조직단위별 지출과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의 사업과 예산을 실·국 단위로 나누어 각각 독립세항으로 구분하는 원칙에 따라 과목구조를 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종래 사업별 예산이 서로 다른 세항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동일한 실·국 단위에서 집행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이처럼 예산과목 구조를 개편한 것은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조직단위별 예산 및 집행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 유사 비목 간의 불필요한 이·전용 절차 등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이처럼 세항을 통합하더라도 인건비·사업비 등 각각의 경비는 그 비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용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으며
 -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타용도 집행의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손희정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작년에 부담금 징수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98년 이후 신설된 부담금 수와 징수액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하시면서 사실 여부를 물으시고 부담금의 존속여부를 재검토해서 폐지 내지는 통폐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부담금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말씀하신 대로, 98년 이후 신설된 부담금은 20개이고 징수규모는 1조 4000억 원 수준입니다.
- 98년 이후 부담금 신설과 신설된 부담금 징수액 증가는 불가피한 요인에 의한 것입니다.
 - 부담금 신설은 수질개선과 개발지역의 교통시설 공급 등 불가피한 요인에 의해 대부분 환경·건설교통 분야에서 발생하였고
 - 신설 부담금의 징수액 증가는 상당부분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종전에 한전이 수행하던 공익사업 부담분을 추가적인 국민부담 없이 부담금으로 전환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에 기인한 것입니다.

- 부담금 신설은 환경보호·개발에 따른 공공시설 공급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 불필요하게 부담금이 설치되어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기존 부담금에 대하여는,
 - 민간 전문가의 부담금 평가를 토대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정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부과실적이 거의 없는 7개 부담금을 폐지할 계획이며,
 -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7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부담금의 신설에 대하여는,
 -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 불필요하게 부담금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점검사업은 이월률이 높고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적정 예산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책연구개발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한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저희 처의 정책점검사업은(04예산안 : 2억 원) 재정집행, 총사업비관리, SOC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사업입니다.

※2002년 수행과제

정책점검사업(2억 원)	정책연구개발사업(4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도입검토 •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성과평가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부대경비 정비방안 • 재정사업 사후평가 제도 도입방안 • 중앙정부예산 집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외국의 재정집행 관리시스템 사례 연구 • SOC민간투자제도 발전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보전 직불제 시행방안 • 신산업 기술개발과 전통산업 지원방안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재정정책 방향 • 교육재정의 역할과 정책과제 • 과학기술분야의 재정운용 비전과 전략제시 • 문화재정 운용의 현안과제와 발전 방향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전략 등

- 매년 상반기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애로사항을 모아 가면서 과제를 발굴하여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 대부분 하반기 발주로 인해 02년의 경우 일부 이월(5600만 원)이 발생한 바, 앞으로는 연구용역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구용역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이월 최소화 노력을 강화한 결과 이월규모는 매년 감소되어 개선되어 가는 추세
 - 이월규모 : (01) 8900만 원 → (02) 5600만 원
 - 불용규모 대폭감소 : (01) 3000만 원 → (02) 100만 원
 - ※03년 예산의 경우 2억 원 중 1억 9990만 원을 계약 완료하여 집행 중이므로 이월 및 불용 없이 연내 집행 완료가능.
- 또한, 정책점검사업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집행점검을 위해 편성된 경비로서
 - 2000년 이후 매년 2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왔으며, 집행점검·사후관리를 위한 예산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중장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재정소요가 큰 주요정책 및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정책연구개발사업(4억 원)과는 차별화가 되도록 연구과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정책점검사업 예산 집행 현황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B)	불용액 (C)	이월률 (B/A,%)	불용률 (C/A,%)	예산대비 집행률 (%)
2000	200	-	200	124	65	11	32.5	5.7	62
2001	200	65	265	146	89	30	33.6	11.3	55.1
2002	200	89	289	232	56	1	19.4	0.3	80.3

(오경훈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OECD 중복과건과 1년 정도의 단기 근무로 예산 낭비와 정보 혼선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국제기구에 과건 중인 고용휴직 공무원의 근무 지원을 위해 국제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는바
 - 이는 정보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 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한 해당 국제기구의 중요성 업무성격 등을 종합적 고려하여 OECD를 포함한 국제기구 과건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 적정 근무기간 유지를 통해 과건자의 전문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감안
 - 외교통상부 행자부 등 정부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 보다 효율적인 국제협력 사업 운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정책점검사업에 있어서 이월률이 높은 사유와, 정책점검사업을 정책평가사업으로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우리 처의 정책점검사업은(04예산안 : 2억 원) 재정집행, 총사업비관리, SOC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사업으로서
 - 매년 상반기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애로사항을 보아 가면서 과제를 발굴하여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 대부분 하반기 발주로 인해 02년의 경우 일부 이월(5600만 원)이 발생한 바, 앞으로는 연구용역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월이 발

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을 조기에 발주하는 등 이월 최소화 노력을 강화한 결과 이월규모는 매년 감소되어 개선되어 가는 추세

- 이월규모 : (01) 8900만 원 → (02) 5600만 원
- 불용규모 대폭감소 : (01) 3000만 원 → (02) 100만 원

※03년 예산의 경우 2억 원 중 1억 9990만 원을 계약 완료하여 집행 중이므로 이월 및 불용 없이 연내 집행 완료가능.

□정책점검사업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집행 점검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이므로

○본래의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연구과제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는 정책점검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으로 예타결과·총사업비 조정결과는 차년도 이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음

□정책점검사업을 ‘정책평가사업’으로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필요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업무 평가는 현재 국무조정실이 담당

(다음 페이지에 계속)

※최근 3년간 정책점검사업 예산 집행현황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B)	불용액 (C)	이월률 (B/A,%)	불용률 (C/A,%)	예산대비 집행률 (%)
2000	200	-	200	124	65	11	32.5	5.7	62
2001	200	65	265	146	89	30	33.6	11.3	55.1
2002	200	89	289	232	56	1	19.4	0.3	80.3

정책연구용역사업의 대상과제 선정 및 집행 관련, 사업대상 선정과 용역수행에 있어 기존의 관행적 폐단을 개선하고 상향식 의사결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연구용역사업은
 - 정부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광범위한 전문가와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등 주요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개발 및 정책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과 현안 업무에 대한 정책분석·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채용경비입니다.
 - 저희 처 연구용역사업의 집행은
 -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정책개발 수요가 필요한 담당 과에서 용역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집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평가할 근거가 없고, 예산지원 사업이라 할지라도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산하기관의 경영이 방만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정산법을 제정하여 기획예산처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산하기관은 출연·보조·위탁 등의 형태로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도 있지만,
 - 상당수 산하기관은 조세는 아니지만 법률에 의한 부담금을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등 국민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평가가 필요하며, 정산법의 제정은 그러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

고 있는 것입니다.

- 한편, 정산법은 제정 취지가 산하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경영성과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하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 감사원, 시민단체, 경제단체 등에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산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기획예산처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의 경영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 그러한 점은 정산법의 핵심인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수행 주체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는 점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 앞으로, 산하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개별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와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가 합심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인력의 지속적 확대는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조직 및 예산의 연도별 변화 내역과 향후 개편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저희 처 예산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인건비 비중이 57.4%인 예산구조상 전체 예산 증가액 중 대부분이 인건비 증가에 기인(04년의 경우 88%)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참고> 99년 이후 기획예산처 예산현황

(백만 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예산안
○인건비	7,744	9,028 (16.6%)	10,421 (15.4%)	13,226 (26.9%)	14,496 (9.6%)	15,592 (10.0%)
○사업비	10,154	9,936 (△2.1%)	10,357 (4.2%)	11,212 (8.3%)	11,656 (4.0%)	11,856 (1.7%)
－기본사업비	6,566	6,112 (△6.9%)	7,203 (17.9%)	8,009 (11.2%)	6,740 (△15.8%)	6,972 (3.4%)
－주요사업비	3,588	3,824 (6.6%)	3,154 (△17.5%)	3,203 (1.6%)	4,916 (53.5%)	4,884 (△0.7%)
합 계	17,898	18,964 (6.0%)	20,778 (9.6%)	24,438 (17.6%)	26,152 (7.0%)	27,808 (6.3%)

※2002년도는 기금정책국 신설(정원 43명 증원)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19억 88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임.

※()는 전년 대비 증가율임.

□조직확대와 관련하여

○저희 처는 99년 5월 창립 이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심의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정책국 신설(02년 3월) (5개 과 43명 증원)

－재정사업 평가기능 강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금년 3월에 기존 정원 범위 내 조직개편

- 재정기획국(5과) → 재정기획실(9과)
- 정부개혁실(8팀) → 재정개혁국(3과)

□향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금관리기본법 등 재정관련법의 제·개정에 따른 기능 변경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尹鐵相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내년도 예산을 과다하게 증액 편성한 것은 예산집행시 이·전용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처의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6.3%로 높은 사유는 인건비 비중이 57.4%를 차지하고 있는 예산구조하에서 인건비가 10.0%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예산증가액(17억 원)중 인건비가 15억 원으로 87.9%를 차지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증가율은 1.7%이며 이중 청사임차료 증액분(2억 5000만 원)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인 사업비 증가율은 전년대비 0.4% 감액 편성된 수준입니다.

<2004년도 자체예산 총괄표>

(백만 원)

구 분	2003 예산 (A)	2004 예산안 (B)	증 감 (B-A)	%
계	26,152	27,808	1,656	6.3
인건비	14,496	15,952	1,456	10.0
사업비	11,656	11,856	200(△48)	1.7(△0.4)

주, ()는 청사임차료 증액분(2억 4800만 원) 제외 시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감액편성한 내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이·전용을 최소화하는 등 당초 목적인 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국제협력사업과 정책연구개발사업의 두가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처 예산 중 연구용역 예산이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사업부처가 아닌 정책부처로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연구용역비는 정부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광범위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처는 재정사

- 업평가 기능 강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금년 3월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 재정사업 성과평가용역(1억 5000만 원)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5000만 원)와
 - 급변하는 재정운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의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 기법 연구를 위한 예산제도개선사업 용역비(3억 원)를 신규계상하였습니다.
-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재정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별로 관련 용역사업의 시행이 불가피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예비비 중 재해대책예비비를 현실에 맞게 늘리는 것이 신속한 피해복구와 반복적인 추경편성 관행을 줄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04년도 정부 예산안의 재해대책 예비비(1조 4000억 원)는 최근의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 수준 및 태풍피해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 작년도 초대형급 태풍 루사 피해 발생 시를 제외하고 보면 과거 5년간(98~02년) 재해대책비의 실제 집행규모는 연평균 1조 2000억 원 내외입니다.

<재해대책예비비 현황>

(억 원)

	98	99	00	01	02	03
• 재해대책 예비비	13,100	17,100	9,000	9,778	49,050	44,000
(본예산)	(4,000)	(6,700)	(9,000)	(7,000)	(13,000)	(14,000)
• 집행실적	12,564	13,588	10,976*	9,305	50,946*	—

※국고채무부담행위 2600억 원(00), 1500억 원(02) 포함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태풍 루사와 금년 태풍 매미의 피해규모 및 복구소요 등을 감안하면 내년 재해대책예비비 예산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 예년 수준의 재해를 복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에 기획예산처가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산하기관을 수익성 위주로 평가할 경우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제9조제1항)에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평가를 주무부처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 시 산하기관의 고유목적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주무부처가 산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
- 따라서, 향후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지표 및 기

준 설정 시에 공익성 수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 중 관련 조문>

제9조(경영실적 평가) ①주무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산하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주무기관의 장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평가를 받는 정부산하기관과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는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주무기관의 장은 정부산하기관의 공익성 효율성 및 경영목표의 달성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경영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안에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온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

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정부산하단체인사운영쇄신지침에서 공개경쟁모집 및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능력 있는 기관장 등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안에는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선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청회와 의원발의안(03. 10. 17)에는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운영하자는 의견 등이 있어, 이를 법안에 보완·반영할 경우 능력이 검증된 CEO가 선임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안 중 관련 조항>

제4조(기관장의 선임) 정부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선임은 각 정부산하기관에 관한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의원발의안 중 관련 조항>

제10조(경영진추천위원회) ①정부산하기관은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영진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승철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04년도 경영평가 용역예산 5000만 원의 용도와 그 돈으로 심도있는 연구가 가능할 것인지와 더불어 정산법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구체적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은 후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이 순서라면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산하기관 경영평가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는 금년과 내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되며, 이를 통해 내실있는 평가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에 산하기관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유형화에 따른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03년도 연구용역사업의 내용>

- 제목 : 정부산하기관관리체계효율화방안
 - 산하기관 유형별 분류(투자·출자·출연·보조·위탁, 연구·기금관리·산업진흥·검사검정·서비스제공), 유형별 경영평

가 방식,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관련기관(예산처, 주무부처, 산하기관) 간 역할분담 등

- 용역기간 : 03. 11월초 ~ 04. 1월 말(약 3개월)

- 용역비 4985만 원, 용역기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내년에는 금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하기관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지표 개발’ 등 본격적인 평가제도 시행에 대비한 연구용역예산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동 법에 따른 경영평가는 05년도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우선 법을 제정한 후 경영평가지표 개발 및 산하기관과의 협의 등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칠 수 있고,

- 그 과정에서 개별기관의 구체적 평가지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정산법 시행 관련 주요일정>

- 03년 정기국회 : 정산법 제정
- 03. 11월~04. 1월 : 정부산하기관 관리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 04. 1월~04. 3월 : 정산법 시행령 제정
- 04년 상반기
 - 기획예산처의 산하기관 유형별로 공통 평가지표 개발
 - 주무부처의 개별 산하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개발
- 04년 중·하반기 : 관계부처·산하기관·전문가 간 등 토론을 거쳐 경영평가방법 협의
- 04. 12월 : 정부산하기관운영위에서 산하기관별 평가편람 확정
- 05. 3월~6월 : 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 실시

(이희규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위원님께서 ①각 부처의 특구 관련 정책과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사업이 몇 개인지 알고 있는지, ②수십개의 각종 정책이 중복추진됨에 따른 지자체의 혼선·부담 가중에 대한 의견, ③중복시행의 효과성 및 기획예산처의 사업타당성 검토방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정부는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3개)·관세자유구역(3개)·자유무역지역(4개) 등 10개의 경제특구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 특성화된 지역발전을 위하여 25개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다양한 지원체계는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나치게 복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경제특구는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전략의 하나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지역혁신체제육성사업은 지방이 산업뿐 아니라 기술·교육·문화콘텐츠 등 자립형 지방화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분야의 역량을 키워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부처별로 소관에 따라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지원을 받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현 제도가 복잡하고 중복지원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정부는 각 사업별로 관련부처 및 전문기관의 면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성과평가를 통해 각 사업 간의 중복 등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방사업의 지원체계를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대폭 재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